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 김애경 · 이영학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김애경·이영학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인 쇄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ISBN 978-89-8479-790-1 93340

가 격 ₩7,000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vii
I. 서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과 의의	8
II. 가설 설정 및 연구설계	11
III. 중국의 국력증대와 외교정책의 변화	21
1. 중국의 국력변화	23
2. 무력분쟁의 증가	27
3. 대외원조의 증대	37
4. 주변국과의 연대	41
5.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46
IV. 중국의 유형, 사례별 주변외교정책	49
1.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 일본, 필리핀	51
2.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 베트남, 인도	63
3. 친미·갈등+협력 유형: 한국	73
4. 중도·갈등+협력 유형: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81
5. 중도·협력 유형: 파키스탄, 미얀마	91
6. 반미·협력 유형: 캄보디아	97

V. 종합분석 및 합의	101
1. 종합분석	103
2.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107
3. 정책적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3

표 · 그림 목차

<표 III-1> 중국의 무기체계 변화표	26
<표 III-2>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분쟁 내용	30
<표 III-3> 모형 검증 결과(중속변인: 무력 분쟁)	32
<표 III-4> 중국 대외원조(2010~2012년)의 지역별 분포 현황	40
<표 V-1> 변수별 중국의 주변외교정책	105
<그림 III-1> 탈냉전 이후 경제성장 추이: GDP 비중	23
<그림 III-2> 경제성장 추이: GDP-PPP 비중	24
<그림 III-3>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	25
<그림 III-4> ‘모형 1’을 통한 경제 부담에 따른 분쟁 예상	34
<그림 III-5> ‘모형 2’를 통한 GDP 성장에 따른 분쟁 예상	35
<그림 III-6> 2004~2011년 중국의 대외원조 추이	38
<그림 III-7> 중국 대외원조의 2010~2012년 주요 플랜트 사업 분야	39

요 약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를 시도하고, 중국의 대북정책과 연계시키려 노력하였다. 우선, 2개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주변외교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화를 모색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이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확대하려는 현상변경의 시도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건과 팔머의 모형(Morgan and Palmer's model)을 중심으로 국력과 현상변경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중국의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시도가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무력분쟁, 하이테크 군비,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 행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의 검증을 통해 우리는 최근 중국 주변외교의 공세성 논란을 단순히 중국의 방어적 외교 행태 혹은 현상유지 선호가 아닌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현상변경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은 중국이 다양한 주변국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중국의 주변외교정책 역시 그 강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현상변경 정책을 강압적 관여와 포섭적 관여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중국과의 이익갈등 정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별 사례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가별 외교정책의 특징을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 △친미·갈등+협력 유형 △중도·갈등+협력 유형 △중도·협력 유형 △반미·협력 유형 등으로 유형화시켰다.

다음으로 중국 주변외교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 작업을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설 1’의 검증 결과에 기초한 중국은 국력 부상에 따라 주변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현상변경 시도가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 2’의 검증 결과에 따라 북한은 ‘반미·갈등+협력’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전형적인 반미국가이고 갈등이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핵심이익까지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유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의 대북정책이 강압적인 관여를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주변외교, 현상변경, 강압적 관여, 포섭적 관여, 대북정책

Abstract

Study on China's Diplomatic Strategy of Neighboring Nations: Implication of China's North Korean Policy

Lee, Ki-Hyun et al.

This study tries to generalize, categorize China's diplomatic strategy of neighboring nations, as well as associating it to China's North Korean policy. First of all, two hypotheses will be verified to generalize China's diplomatic mechanism of neighboring nations. According to the first hypothesis, China's recent foreign policy towards the surrounding countries attempts to change the current status quo to expand its influence and power. The research, based on the Morgan and Palmer's model, made a scientific examination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national power and the alteration of the status quo, and verifie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China's national power increase and its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As China's national power grow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been augmenting armed disputes, developing high-tech armaments, increasing foreign aids, forming alliances with weak nations, etc. These behaviors resembles the past powerful nations'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The verification of the first hypothesis demonstrates that the controversy of China's recent aggressive diplomacy of neighboring nations is not a defensive diplomacy or a preference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stead, it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actively alter the status quo that is presented in the takeoff stage as a powerful nation.

The second hypothesi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intensity and level in China's diplomatic policy of neighboring nations depending on each country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is building diverse relationships with different countries. This research divides China's policy of changing the status quo of surrounding countries into two: a coercive engagement and inclusive engagement. By setting the degree of conflict with china and the level of relationship with the US as major variables to the two categorize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cases of different nations. It also classifies China's diplomatic features according to distinct countries in the following types: Δ pro-US and core interest collision, Δ moderate and core interest collision, Δ pro-US and

conflict+cooperation, Δ moderate and conflict+cooperation, Δ moderate and cooperation, Δ anti-US and cooperation, etc.

In the second place, it draws the implication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generalizing and categorizing China's diplomacy of neighboring nation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the first hypothesis, second one predicts that the increase of China's national power will intensify its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by projecting its goal and interests more actively when dealing with one of its neighboring country, namely,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the second hypothesis classifies North Korea to 'anti-US and conflict+cooperation type.' North Korea is a traditional anti-US country. While there ar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considers that such conflicts do not invade Chinese core interests. Compared to other nations' types, this indicates a lower probability of China's coercive engagement in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on its attempt to make a status quo alteration.

Keywords: China's diplomacy of neighboring nations, change of status quo, coercive engagement, inclusive engagement, China's policy of North Korea



I. 서론

1. 연구배경

2010년 한반도에서 소위 G2라는 세계 양대 대국 간 군사적 힘겨루기가 발생한다. 사건의 발단은 천안함 격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북한발 군사도발 때문이었다. 북한의 만행을 응징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대규모 합동훈련을 전개하였다. 남북관계의 문제를 떠나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동북아 질서의 현상유지를 깨뜨리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전례를 보면, 한미연합군의 경고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 야욕이 한 풀 꺾이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였다. 중국군부가 맞불형 군사훈련이라는 전례 없이 강한 대응을 한 것이다. 분명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그 변화는 명약관화해졌다. 센카쿠 열도(釣魚島, 중국명: 닌타오) 분쟁이 그 해부터 본격화한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 섬의 소유권을 두고 중일 양국 간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정치지도자들 역시 국내단결을 목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전까지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논쟁은 되도록 뒤로 미루고, 공동개발을 하자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내건 도광양회의 기본 정신이 주변 국가들과는 되도록 분쟁을 만들지 말고, 주변안정을 통한 경제성장에 집중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중국은 주변부의 안정을 중시해왔다.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인접국에 둘러싸여 있다. 중국은 2만 2천km의 육로와 1만 8천km의 해로 국경을 통해 각각 15개국, 6개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주변국 중에서는 러시아, 일본, 인도 그리고 전략적 인접국가인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중국이 자연

스럽게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혁개방’과 ‘경제건설 우선’이라는 국내적 환경 변화는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하였다. 이는 ‘신안보관(新安全關)’이라는 중국 외교이념으로 대표된다. 탈냉전 이후 중국 외교의 주요 목표는 평화로운 주변 환경 건설 추진이었다. 신안보관의 핵심이념인 ‘평등(平等)’, ‘상호신뢰(互信)’, ‘상호이익(互利)’, ‘협력(協作)’처럼 중국은 주변국간 관계 형성과정에 점진적 발전을 거두어왔다. 중소 국경교섭과 군비축소(평화협정)가 이루어졌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경 및 영토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의 조직 내에서 주변국과 전통, 비전통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¹

주변국과의 영토, 영해 분쟁 문제 역시 평화적 해결을 기본으로 ‘논쟁은 보류, 공동 개발(擱置爭議, 共同開發)’이라는 외교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 원칙은 국가 간 영토, 영해 분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평화관계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이는 큰 맥락에서 보면 경제건설에 주력하기 위해 주변국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요소를 없애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한반도, 일본과의 갈등 외에도 남중국해 도서 분쟁 등 중국과 주변국의 심한 갈등과 충돌이 포착되었고, 이는 중국이 냉전 이후 보여준 선린우호(善隣友好) 주변외교의 행태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2013년 10월 24일, 중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주변외교공작회의(周邊外交工作座談會)’가 개최되었다. 최근 중국과 주변국들 간 갈등

¹ 翟崑, “新安全觀3.0版: 推進周邊命運共同體建設體建設,” 『世界知識』, 2013年 24期, p. 24.

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과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향후 주변외교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 회의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7인과 외교 관련 주요 인사가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의 향후 주변외교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회의 내용에서는 시진핑 시기의 새로운 이념이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주변외교 방침을 재차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웃과 잘 지내고(以鄰爲伴), 화목한 이웃(睦鄰), 안정된 이웃(安鄰), 부유한 이웃(福鄰)”이라는 기준에 중국이 주장해 왔던 주변외교의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사이좋고(親), 진실되고(誠), 베풀고(惠), 수용(容)한다”는 이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과 주변국과는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결과를 통해 중국 주변외교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여전히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중국해 도서 갈등까지 사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통 큰 양보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 행태 혹은 정책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 혹자의 주장대로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외교의 공세성이 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주장대로 가만히 있는 중국을 향한 주변국들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적극적인 방어 행태가 다소 과격하게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두 가지 담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상유지론’이다. 현상유지적인 시각은 중국의 부상이 극대화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현재 주변지역 질서의 틀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의 평화발전론이나 서방의 세력전

I
II
III
IV
V

이론과 비교해서 주장은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의 평화발전론은 세계질서의 규칙제정자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세력적이론 역시 아직까지 미국의 종합국력을 뛰어넘기에는 중국의 힘이 약하다는 가정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은 결국 미국 주도의 현 질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의 외교 행태 역시 표면상 공세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에 대한 방어적 성격에 가깝고 현재의 질서를 타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상변경론’이다. 현상변경적인 시각은 국력 신장에 따라 중국이 자국의 역량을 외부로 팽창시키고, 특히 주변부터 새로운 질서 창출을 시도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시각에 따르면, 분명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적이다. 과거의 경제이익을 최우선하는 도광양회 외교 전략보다는 안보, 영토이익을 극대화하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외교 전략의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역시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의 국제질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현재 주변외교 행태가 단순히 방어적이고, 향후 국력이 더 성장했을 때도 현상유지를 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3년 주변외교공작회의에서도 중국의 주변외교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큼의 큰 내용은 없었지만 분명 주목할 점이 있다. 과거 중국이 주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회의에서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더 나아가 “좋은 국제환경조건을 쟁취하자(爭取良好外部環境)”는 적극적인 표현이 등장하였다. 이전 중국외교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維持一個和平的有利於經濟建設的外部環境)”이었다. 이는 당시

의 환경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변화를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변했다. 그들의 표현대로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 ‘여시구진(與時俱進)’으로써 주도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이로써 유리한 방향으로 견인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외교 목표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목표가 ‘경제건설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경제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다. 경제건설과 민족부흥 실현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 경제건설만으로는 민족부흥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부(國富)’와 ‘국강(國強)’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국가는 비록 부유할 지라도, 국제지위가 하락한다면 이를 ‘민족부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

특히,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시진핑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현상변경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중관계를 재정립하지는 ‘신형대국관계’의 지속적인 제시라든지 2014년 5월에 개최한 ‘제4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CICA)’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창하며 아시아인들이 미국에게 안보를 기대하지 말자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경제 신구상’ 등은 시진핑 정부의 주변외교가 과거보다는 분명 적극적이고 공세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중국 주변외교의 본질적 특징을 고민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주변외교와 관련해 주로 중앙아시아, 아세안 지역에 한정된 연구들이 다수를

² 閻學通, “中國外交全面改革的開始,” 『世界知識』, 2013年 24期, p. 15.

I
II
III
IV
V

차지하고 있다.³ 중국과 서방의 연구 역시 주변외교와 관련해 국내보다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고찰보다는 양자관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⁴ 최근 시진핑 정부는 주변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상영토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주변외교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고찰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시사적 분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변외교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인 종합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서 중국의 주변외교를 연구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이다. 기존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양자관계 혹은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의 주변외교에 있어 일정정도의 패턴과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중국의 대북정책을 보다 새롭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과 의의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의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 행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³ 대표적으로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KWP)』, 제22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pp. 1~40; 이희옥, “중국의 주변지역전략과 대동남아 정책의 새로운 조정,” 『중소연구』, 제35권 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pp. 15~45; 주장환,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서진(西進)전략의 배경, 내용,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32권 (세종연구소, 2014), pp. 58~61 등의 연구가 있다.

⁴ 張蘊嶺, 『中國與周邊國家: 構建新型夥伴關係』(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Bruce A. Elleman, Stephan Kotkin and Clive Schofield (eds.), *Beijing Power and China's Borders* (Armonk, New York and London: M.E. Sharp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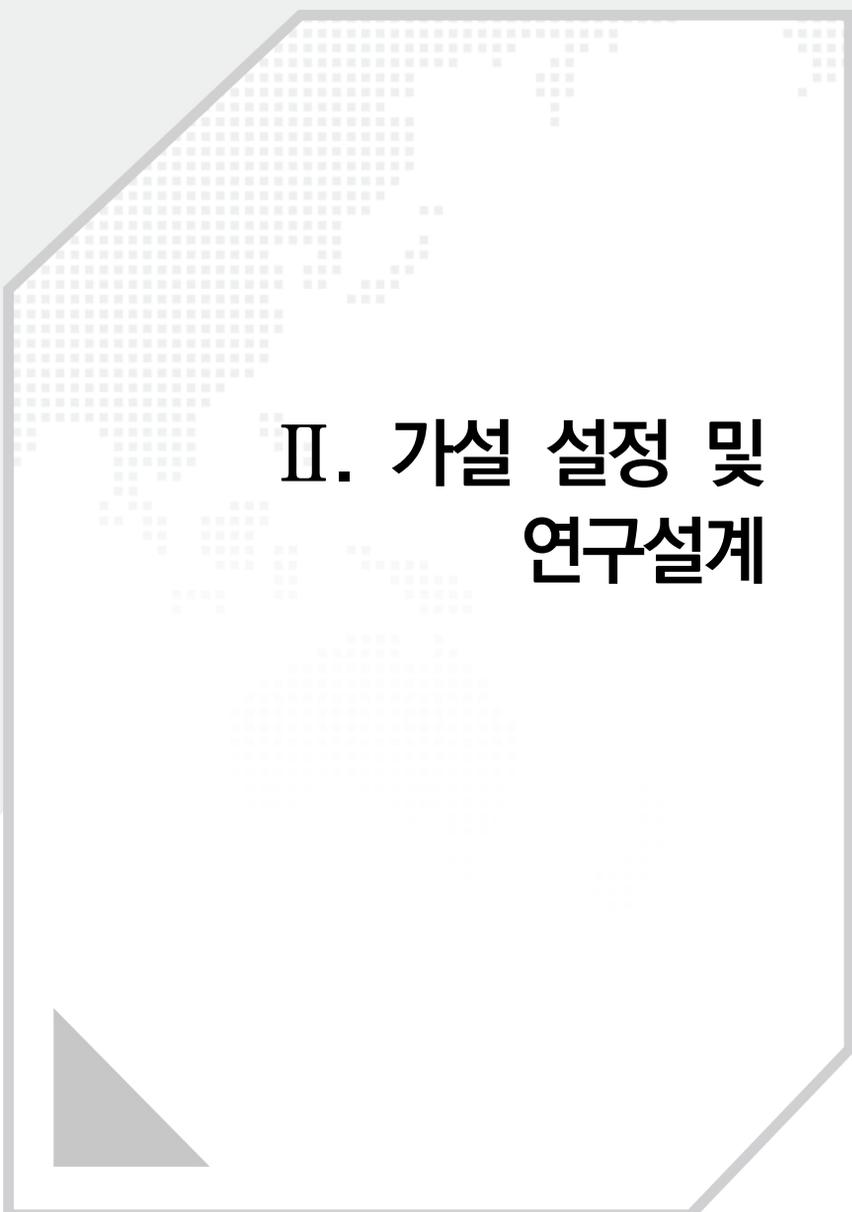
질문이다. 이는 중국의 주변부에 대한 외교적 힘의 투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주변질서에 대한 현상변경 시도 여부와도 관련성이 깊다. 즉, “중국은 국력증대에 따라 현 주변질서를 인정하는 현상유지 대신 자국의 이익과 규범을 강요하는 현상변경을 시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이다.

둘째, 중국의 주변외교가 현상변경을 추구한다면 지역별 혹은 각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냉전 이후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는데 ‘전략형(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가와의 관계로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국가관계로서는 높은 수준의 틀)’, ‘협조형(한국과 같은 국가와의 관계가 이에 속하며 다양한 국제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경우)’, ‘건설형(일본, 미국, 인도, 몽골 등 국가와의 관계, 중국은 이 국가들과의 관계가 보다 개선되기를 원하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우호형(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 국가와의 관계로 크게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또한 미국과의 변수를 통해 ‘친미형 국가그룹’, ‘중도 국가그룹’, ‘반미 국가그룹’ 등에 대한 중국 외교정책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주변외교정책 강화 흐름이 자국의 규칙과 질서를 강제하면서 주변부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주변외교 변화의 흐름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 중국의 대북한 외교정책은 어떠한 국가군의 조건과 비슷한 것일까?

⁵ 吳琳, “冷戰後中國周邊政策的歷史演進,” 『國際論壇』, 2010年 3期, p. 46.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의의는 중국 주변외교의 일정한 메커니즘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2개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주로 중국 주변외교의 본질과 동학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있어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접근을 극복하고, 중국 주변외교 정책의 일반화된 분석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차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국 주변외교를 연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연관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력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II. 가설 설정 및 연구설계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국력이 증대 중인 중국은 현상유지보다 현상변경을 시도한다.

이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현상변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국 주변외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써 본 연구는 ‘Two-Good Theory(이하 TGT 이론)’를 사용한다. TGT 이론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분명한 설명이 가능하며, 국력증대 중인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 행위를 수준별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TGT 이론은 각 국가들의 속성을 무시하고 이론화를 위해 가정을 최대한 단순화시켰다. 모든 국가는 단순하게 두 개의 목적만을 추구하는데, 현상을 유지하거나,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것 밖에 없다. ‘현상유지(Status quo)’와 ‘현상변경(Change)’이라는 두 가지 행동은 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국력이 증대될수록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해지지만, 그 반대로 국력이 축소된다면 현상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제공할 수 있다.

$$\frac{\Delta change}{\Delta \text{국력변화}} \text{는 체증법칙 vs } \frac{\Delta status quo}{\Delta \text{국력변화}} \text{는 체감법칙}$$

이 이론에 따르면, 강대국은 약소국에 비하여 현상변경에 국력을 투자하지만, 약소국은 현상유지에 국력을 투자하는 패턴을 보인다. 가정을 세울 수 있다. TGT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모형은 모건과 팔머의

I
II
III
IV
V

연구에서 시도되었다.⁶ 모건과 팔머는 국력과 현상변경 시도를 핵심적인 작동변인으로 보고, 이러한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변인으로 ① 현상변경과 관련된 정책은 하이테크 군비 확충,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무력분쟁을 설정하였고, ② 현상유지와 관련된 정책은 전통적(low-tech) 군비 확충, 강대국과 동맹을 설정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현상변경을 추구하였던 국가들이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19세기 최강국인 영국이 세계 노예무역 금지에 가장 열정적이었고, 현재의 최강대국 미국 역시 테러리즘과의 전쟁, 핵확산 반대 등 현재의 현상유지 보다는 자국의 선호를 적극 반영시키는 현상변경의 일선에 있었다는 것이다.⁷

특히, TGT 이론을 미국에 적용해 보면 첫째, 냉전 이후 미국의 경제력이 최대로 성장하던 시기(1985~2003년)에 미국은 세르비아 사태 개입,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등 군사분쟁 개입, 군사충돌 등 무력분쟁 빈도가 증가하였다. 둘째, 동맹 강화 현상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소련 해체 이후 NATO의 해체를 예견했던 바와 달리, 미국은 동맹 강화 차원에서 NATO를 오히려 확대하였다. 동맹의 주적인 소련이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견은 분명 합리적인 것이었다. 셋째, 미국은 개발원조량을 증대시키면서 수혜국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⁸ TGT 이론의 시각으로 보면 강대국인 미

⁶-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sights from the 'Two-Good' Theory," *Issues & Studies*, Vol. 35, No. 3 (May/June, 1999), pp. 35~60; 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A Theory of Foreign Poli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⁷-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Power Transition, The Two-Good Theory, and Neorealism: A Comparison with Comments on Recent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3, Issue. 3 (2007), p. 333.

국은 자국의 선호와 희망을 반영하기 위해 자국의 능력을 투입하고 현상변경을 시도해온 것이다.

중국 역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 국력 부상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세적 외교 행태와 다양한 충돌 역시 단순한 중국의 수세적 대응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TGT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 역시 국력증대에 따른 자국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현상변경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주변국가들과 상당한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주변외교 강화 정책까지 천명하는 상황에서 TGT 이론을 통한 검증은 분명 중국의 주변외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2: 미국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이익 갈등 관련 변수가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가설 1’이 중국에도 적용된다면, 중국의 최근 외교 행태는 적극적인 자국의 선호 반영이자, 현상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현상변경 의도는 주변에서부터 투사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이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인 주변외교 정책 및 중국식 규범(아시아 신안보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강조하고, 주변국들과의 충돌도 불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양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외교적 수단 내지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이 적극적인 주변외교를 통해 현상변경을 시

⁸-Ibid., pp. 341~343.

도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를 주변국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사시키는 관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관여정책은 시장과 민주주의, 다자주의 국제제도에 의해 피관여국을 속박하고, 피관여국을 관여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틀에 넣어 결국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는 관여를 통해 구공산권 국가들을 미국의 시장자본주의, 민주주의, 미국의 문화적 틀,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국제제도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⁹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주변국들이 자국 주도의 질서, 문화적 틀, 규범 등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대주변국 관여정책은 다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포섭적 관여

-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밝히면서, 영토주권에 대한 양보불가 입장은 계속 유지
- 물리력이나 군사력 사용은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
- 관련국과 주변국의 대중국 인식을 고려하면서,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경주
-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을 시도하며, 이를 위한 경제협력 도모
- 원조 및 차관형식의 경제교류 및 인도주의 원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상과 유인

강압적 관여

-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한 존중과 양보불가를 관련국에 강하게 요구
- 물리력이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거칠고 강압적으로 운용하여 처벌
- 관련국과 주변국의 대중국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경시

⁹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3권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 232.

또한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중국의 외교정책(강압적 관여, 포섭적 관여)을 결정짓는 독립변인을 설정하였다. 일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요인과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능력, 국내정치, 국제체제, 타국의 행위, 리더십, 이념, 정책결정구조, 역사적 전통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현 패권국 미국과의 관계와 주변국들이 중국과 어떠한 이익갈등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 미국과의 관계는 친미(동맹), 중도(파트너), 반미 그룹으로 분류
- 중국과의 이익 갈등 정도는 영토분쟁 같은 핵심이익 갈등이 있는지, 갈등과 협력의 공존 그리고 대체적으로 협력적 이익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까지 3단계로 구분

미국과의 관계요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시아 지역 내 미중 간 전략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주변국에 대한 접근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극복이 중국의 주요 도전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종합국력의 제고를 통해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상대적 국력 격차 축소를 배경으로 중국의 대미 자신감이 대외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 및 재균형 전략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견제로 인식되면서, 양국은 2010년 이래 다양한 마찰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미국의 국력 쇠퇴를 목도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I
II
III
IV
V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테스트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및 경제 질서를 자국 주도의 새로운 틀로 짜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주변국들이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국의 해당국에 대한 정책 및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핵심이익 갈등의 유무이다. 최근 중국의 외교전략 핵심기조는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의 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외교는 여전히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평화발전이 자국 핵심이익의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인민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어느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핵심이익을 절대로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⁰ 중국의 핵심이익은 2011년 9월 국무원이 발간한 『평화발전백서』에서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통합, 국가통일, 중국 헌법이 규정한 정치제도와 사회의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정의하였다.¹¹ 이러한 핵심이익은 보통 주권, 영토, 발전권익 등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중국은 주변국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해양영토 및 발전권익의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갈등 및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핵심이익에 대해서

¹⁰ “習近平在出席解放軍代表團全體會議時強調,” 『經濟日報』, 2014年 3月 12日, <http://paper.ce.cn/jjrb/html/2014-03/12/content_191487.htm> (검색일: 2014.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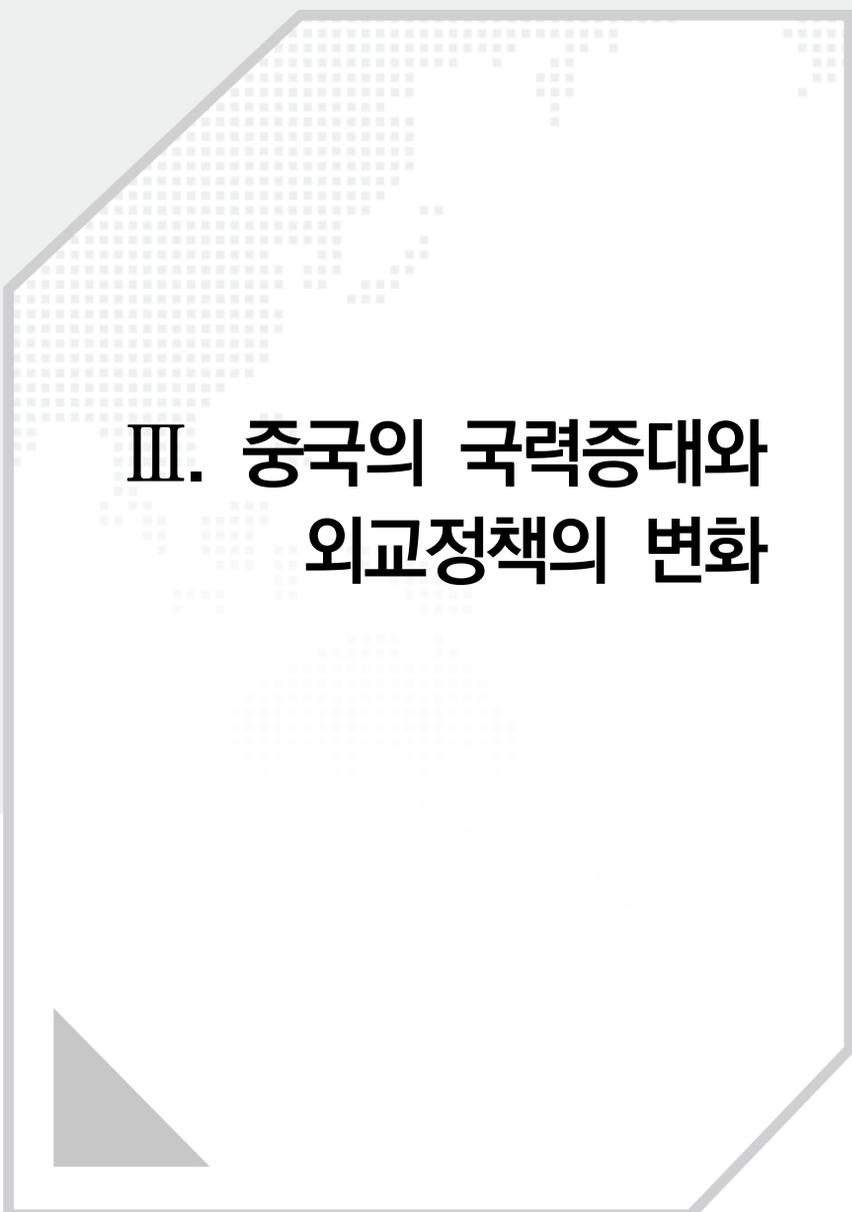
¹¹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2011)』, <http://www.scio.gov.cn/zxbd/nd/2011/Document/1000721/1000721_1.htm> (검색일: 2014.10.10).

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이익 갈등 유무가 중국의 해당국에 대한 정책 및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주변외교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지리적으로 육지·해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북아·동남아·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의미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 장샤오밍(張小明)은 중국의 주변국가들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육지·해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군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북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부탄,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육지국경 14개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해양국경 6개국) △국경을 마주하지는 않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군으로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 △특수한 주변국가인 미국이다.¹²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에 따라 중국의 주변국가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단, 특수한 주변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주요 변수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이고, 유형 분석과정에서 주요 사례가 명백히 드러나는 국가들을 위주로 분석할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 매트릭스를 도출하였다.

구분		미국과의 관계		
		친미(동맹)	중도(파트너)	반미
중국과의 이익갈등 정도	핵심이익충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
	갈등+협력	한국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 몽골	-
	협력	-	파키스탄,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12-張小明, 『中國周邊安全環境分析』(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3),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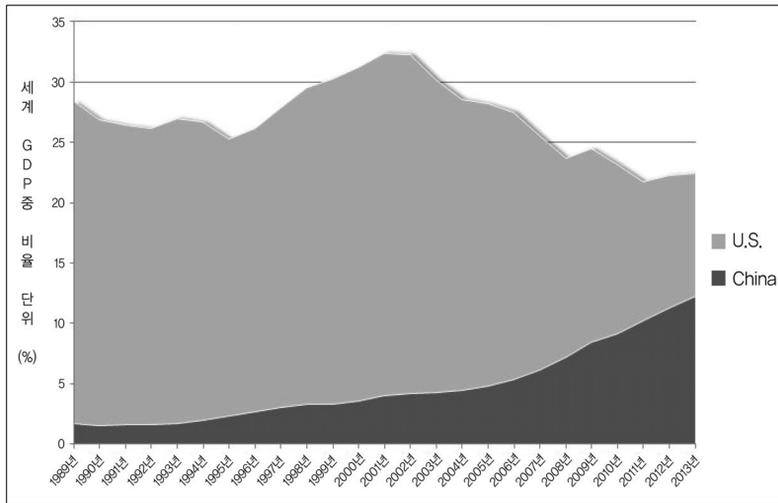
Ⅲ. 중국의 국력증대와 외교정책의 변화

1. 중국의 국력변화

가. 경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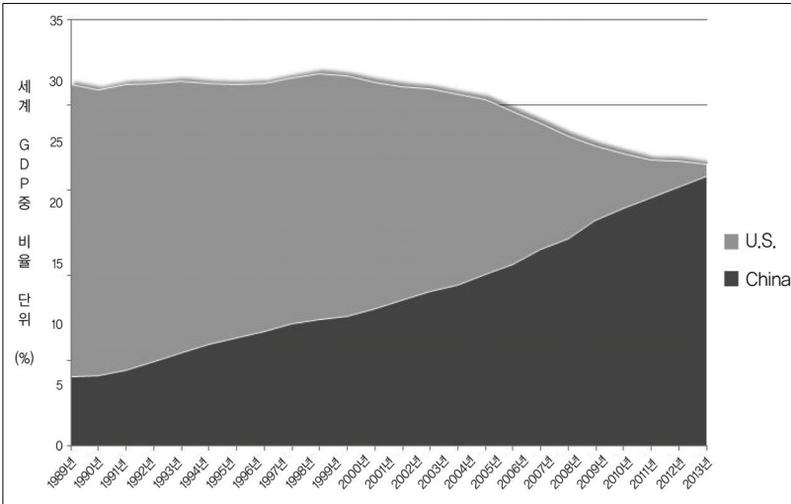
탈냉전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최근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III-1> 참조).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할 경우 이는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그림 III-2> 참조).

● 그림 III-1 탈냉전 이후 경제성장 추이: GDP 비중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country/china>> (검색일: 2014.10.22).

● 그림 Ⅲ-2 경제성장 추이: GDP-PP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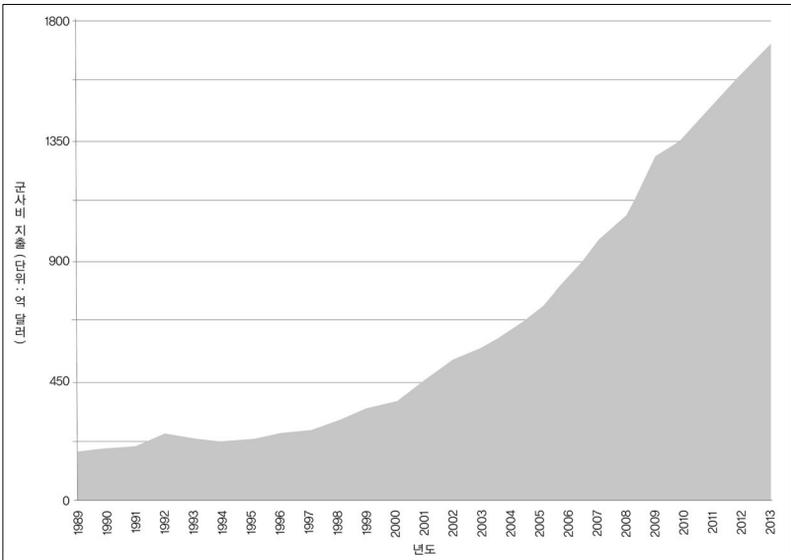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country/china>> (검색일: 2014.10.22).

나. 군사력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군사비 지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산하고 있는 각국의 군사비 지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약 1,800억 달러(한화 약 180조)로 추정되며, 이러한 군비 지출의 증가는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놓여있다.

그림 Ⅲ-3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milex_database> (검색일: 2014.8.23).

또한 OECD의 최근 통계자료¹³에 따르면, 중국이 매년 기초과학 연구 및 개발(Research & Development)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3,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대는 단순히 군사

¹³-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Publishing*, Vol. 2014, Issue. 1 (July 2014), <<http://dx.doi.org/10.1787/msti-v2014-1-en>>.

¹⁴-중국의 R&D 지출액 추이(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June 2014), <<http://stats.oecd.org>>.

년도	2009	2010	2011	2012
R&D 지출액	1,845억 달러	2,130억 달러	2,478억 달러	2,935억 달러
GDP 비중	1.70%	1.76%	1.84%	1.98%

력의 양적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전략연구기구(IISS)에서 발간하는 The Military Balance 연감이 조사한 군사력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은 첨단 무기의 개발과 무기체계 개량에 힘쓰고 있다.¹⁵

● 표 III-1 중국의 무기체계 변화표

(단위: 대)

무기체계	2013년	2014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72	66
ICBM 장착 핵잠수함	4	4
전술항공기(Tactical Aircraft)	1,903	2,193
항공모함	1	1
핵잠수함	5	5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 & C)	14	18
무인항공기(UAV)	some	some
통신위성(Communications Satellite)	4	5
탐색/위치/시간 위성(Navigations/Posing/Timing Satellite)	17	17
정보감시정찰 위성(ISR Satellite)	20	25
전자신호정보 위성(ELINT/SIGINT Satellite)	11	12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13~2014년의 정보 통합 재구성.

연감이 수집한 자료를 살펴볼 때, 중국의 무기체계는 첨단기술 기반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⁶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통적 무기는 유지수준이지만, ISTAR¹⁷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 만

¹⁵-국제전략연구기구(IISS), *The Military Balance*, <<http://www.iiss.org/en/publications/military-s-balance>> (검색일: 2014.8.23).

¹⁶-국제전략연구기구(IISS)의 *The Military Balance*에 제시된 중국 군사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현규의 논문을 참조. 김현규, “다층적 세력전이이론으로 본 중·미 및 중·일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하다. ISTAR 분야에 포함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 AEW & C),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와 첩보위성(Intelligence Satellite) 및 항행위성(Navigational Satellite)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2. 무력분쟁의 증가¹⁸

본 연구의 ‘가설 1’에 따르면, 중국은 국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있어 현상유지보다는 현상변경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주요 변수 중 하나는 국력증대와 무력분쟁과의 상관성이다. 즉, 국력증대와 무력분쟁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면 중국은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현상변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 추세 역시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이 변수에 대한 검증은 시도한 적이 있다. TGT 이론의 창시자인 모건과 팔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부터 1992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검증하였다.¹⁹ 그러나, 이 모형은 연구시기와 지표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연구시점이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중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모건과 팔머의 모형에서 제시하는 ‘국력’의 계측방식이 현재 적용될 경우 중국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 이후인

17-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목표 획득(Target acquisition), 정찰(Reconnaissance)을 위한 군사 장비를 의미하며, 조기경보기와 정찰 위성 등을 포함한다.

18- 본 절의 통계분석에는 서용택(한국외대 박사과정)의 많은 공헌이 있었음을 밝힌다.

19- 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sights from the ‘Two-Good’ Theory,” pp. 35~60.

1989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시점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모건과 팔머의 모형과 이를 변화시킨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두 가지 통계 모형을 비교해 검증의 확실성을 높였으며, 최근 중국 외교정책 변화의 추세까지 반영토록 노력하였다.

가. 종속변인

본 모형에서 종속변인은 ‘현상변경에 대한 시도’다. 모건과 팔머의 연구에서는 ‘무력분쟁’을 특정 국가가 현상변경을 추구하는(Change-seeking) 핵심적인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무력분쟁이 증가할수록 중국이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속변인의 계측은 전 세계의 분쟁연구 자료를 누적하고 있는 COW(The Correlates of War)의 국가 간 무장 분쟁 자료(MID)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COW 프로젝트는 전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하여 1963년부터 세계의 전쟁자료를 체계적으로 누적하고 있다. COW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는 전쟁과 국가 간 분쟁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코드일람과 함께 공개 중이다. COW 프로젝트의 자료는 전쟁과 분쟁관련 연구에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4년 현재까지도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COW 프로젝트의 MID 자료는 국가별, 분쟁별로 정리되어 2014년 2월에는 4.01버전으로 최신화 되어 있으나, 4.01버전에서 다루고 있는 전쟁 및 분쟁자료는 2010년까지의 기록이다.²⁰

연구시기로 상정하고 있는 탈냉전 이후(1989~2010년) 시기 중, 중

²⁰-David M. Jones, Stuart A. Bremer and J. David Singer,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15, No. 2 (1996), pp. 163~213.

국이 관여하고 있는 분쟁은 총 54건에 해당한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후에 발생한 분쟁²¹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다.

MID에서는 분쟁의 수준을 다섯 단계²²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의 54건 분쟁을 이에 따라 분류하면, 군사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분쟁이 총 14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을 직접 등장시키는 30건의 무력시위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분류된 항목에 따르면 무력시위, 경고, 국경수비의 강화, 국경 충돌 등의 행동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사력을 직접 등장시킨 무력시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 한층 호전적인 단계로, 직간접적인 무력의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가 10건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봉쇄, 영토점유, 구금, 공격, 직접적인 충돌이다. 그중에서 구금이 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전면적인 전쟁에 해당하는 분쟁은 없으나, 무력시위나 부분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군사력 등장²³의 경우가 40건에 달하고 있다.

²¹-COW의 MID 자료에 따르면 1949년 이후 2010년까지 중국의 분쟁은 총 170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²²-군사행동 없음, 무력사용 위협, 무력시위, 무력 사용, 전쟁이라는 다섯 단계의 구분을 하고 있다.

● 표 III-2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분쟁 내용

	1949년 이후	1989년 이후	비고	
분쟁 수	170 건	54 건	전체 분쟁 대비 31.8%	
분쟁 수준별 구분	군사 행동 없음 (No Militarized action)	14		-
	무력사용 위협 (Threat to use force)	0		-
	무력시위 (Display of force)	30	무력 시위(Show of force)	21
			경고(Alert)	1
			국경수비강화(Fortify border)	3
			국경 충돌(Border violation)	5
	무력 사용 (Use of force)	10	봉쇄(Blockade)	1
			영토점유(Occupation of territory)	1
			구금-압류(Seizure)	4
			공격(Attack)	2
충돌(Clash)	2			
전쟁 (War)	0			-
총계		54		54

출처: COW MID data, <www.correlatesofwar.org> (검색일: 2014.8.23).

나. 독립변인

본 연구모형에서의 독립변인은 중국의 '국력'이다. 이러한 독립변인의 계측에 있어서 첫 번째 모형은 모건과 팔머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 비중과 그 변화량을 상정하였다. 전쟁 및 분쟁 관련 연구에서 경제 분담 비중은 해당 국가의 강철 및 철(Steel and Iron) 생산 분담과 해당 국가의 에너지 소비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독립변인의 자료는 종속변인과 마찬가지로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이다.

모건과 팔머의 모형에서 국력 신장을 세계 생산 대비 중국의 철강 생산량과 중국의 에너지 소비 비중을 통해 계측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강생산량에 대한 통계 수치를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서 수집한 중국과 세계의 자료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²³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통계 수치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U.S. EIA)이 수집한 중국과 세계의 에너지 소비 자료를 조합하였다. 이렇게 두 지표를 통하여 중국의 국력을 계측하였다.²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1989년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 9%에 불과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2010년에는 50%에 달하는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경우 1989년 전 세계 약 8%를 소비하였으나, 2010년에는 소비비중이 19%로 급증하였다. 두 수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모건과 팔머의 모형에서 계측한 최대 15% 수준을 훨씬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오히려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모형의 독립변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력 비교의 척도로 GDP를 설정하였다. 자료는 세계은행에 보고된 전 세계 GDP 수치를 활용하였다.²⁵ GDP 수치는 PPP를 반영하지 않은 실제 GDP 수치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비 지출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군사비의 경우 GDP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변인을 중복

²³- World Steel Committee on Economic Studies, Steel Statistical Yearbook 2013, 2013.

²⁴- 미국 에너지정보국(U.S. EIA), <<http://www.eia.gov/cfapps/ipdproject/IEDIndex3.cfm?tid=44&pid=44&aid=2>> (검색일: 2014.10.10).

²⁵- *Ibid.*

측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본 수정 모형은 GDP 수치만을 반영하였다.

다. 연구검증

국력증대와 현상변경을 위한 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쟁 자료와 같은 가산자료(Count Data)의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이 아닌 로그(log)를 취한 일반화 회귀분석이나 포아송 회귀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의 분포양상을 포아송 분포에 따라 회귀시키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수행에는 STATA v.12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III-3 모형 검증 결과(종속변인: 무력 분쟁)

모형 1	계수	모형 2	계수
중국의 세계 경제 부담 (철강, 에너지소비)	0.453 (0.688)	중국의 세계 경제 부담 (GDP)	0.063 (0.289)
변화량	3.846 (0.882)	상수	0.638** (0.027)
상호작용변인	-31.808 (0.622)	-	-
상수	0.812** (0.033)	-	-
Log likelihood	-42.959	Log likelihood	-46.301
Chi-Square	2.13	Chi-Square	1.08
Significance	0.001***	Significance	0.001***

단측검정량 수준 (*p < 0.1, **p < 0.05, ***p < 0.01)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주요 독립변인인 세계 경제 분담의 계수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연구모형 모두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 비중이 높아질수록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모형의 결과를 간략히 서술하자면, 중국의 국력이 증대할수록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가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은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분담을 철강 생산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통하여 계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형 1’의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에 대한 계수인 0.453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결과적으로 분쟁의 횡수가 증가한다는 전망을 나타낸다. ‘모형 1’에서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변인인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률에 대한 변화량 계수 역시 3.846이며, 이는 변화량이 클수록 분쟁 횡수가 증가한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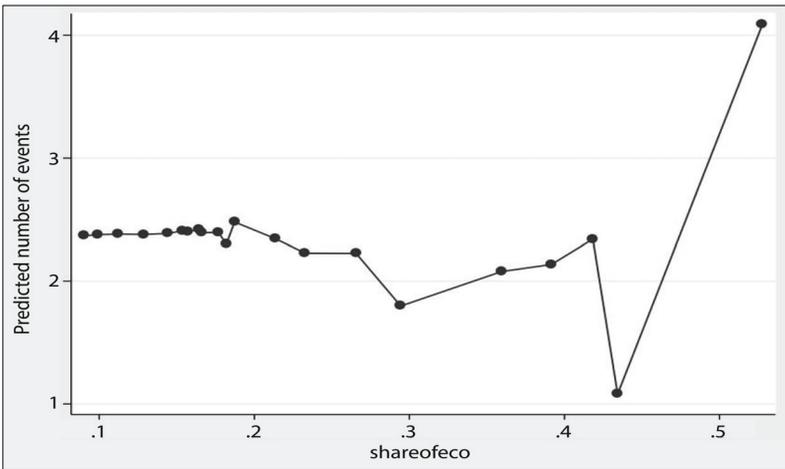
모건과 팔머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과 마찬가지로 ‘모형 1’에서는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률과 그 변화량이 서로 교호(交互)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효과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두 변인을 곱한 상호작용변인(Interaction Term)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변인인 상호작용변인 계수는 -31.80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제변인의 효과는 앞서 두 변인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분쟁가능성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가정된 상황을 조절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림 III-4>는 ‘모형 1’을 통하여 추정한 경제 분담 수준에 따른 분쟁 가능 횡수이다. 철강 생산 및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의 10%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형을 통한 분쟁의 가능성은 2건 가량이며, 이러한 추세는 경제 분담이 커질수록 그 진폭이 커지고 있다. 진폭이

커진다는 것은 현재 모형에서 통계적 추정이 불확실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가산자료 자체의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목할 점은 경제 분담 수준의 차이에 따른 분쟁 발생 예상 건수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형 1’의 경제 분담 수준은 철강 및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10년 현재 이미 50% 가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예상 건수가 4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상호작용변인의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의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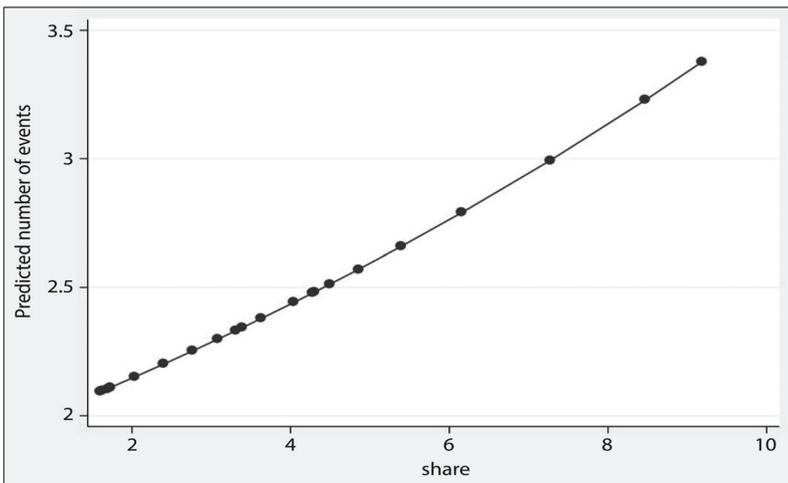
● 그림 III-4 ‘모형 1’을 통한 경제 분담에 따른 분쟁 예상



‘모형 1’은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률을 철강 생산 및 에너지 소비를 중심으로 계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국력을 계측하는 연구에서는 군사력이나 GDP를 기본 수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모형 1’의 경제 분담률 지표는 중국의 성장을 분명하게 드러

내지만 중국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모형 1'에서는 2010년 현재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률이 50%에 달하게 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모형 2'에서는 '모형 1'이 중국의 경제 능력을 확대 해석하였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한 국가의 경제 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GDP를 세계 경제 분담 변인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GDP를 이용하여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분담을 계측한 결과, 변인의 계수는 0.063으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국력 연구에서 활용되는 GDP 수치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세계 경제 분담 비중이 높아질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5>을 보게 되면, '모형 1'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III-4>와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한 선형적 관계가 나타난다.

● **그림 III-5** '모형 2'를 통한 GDP 성장에 따른 분쟁 예상



- I
- II
- III
- IV
- V

현재 두 연구 모형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두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충분하게(Significance<0.01)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각 모형의 독립변인과 상호작용변인에 이르기까지 각 변인의 계수에 대한 통계적 적실성이 빈약한 편이다. 이는 현재 누적된 자료의 통계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1989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분쟁 건수는 54건에 달하지만, 이러한 54건의 데이터를 연도별 가산자료로 전환한다면, 총 22건의 시계열 자료로 정리할 수 있다. 계수의 통계치는 추정 값의 평균 오차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의미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값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모형 1’과 ‘모형 2’가 보여주는 통계치는 현재 구축된 가산자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종속변인 추정 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료를 중심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누적시켜 나가는 전통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자료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지언(Bayesian) 방식의 통계 추론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두 모형이 보여주는 거시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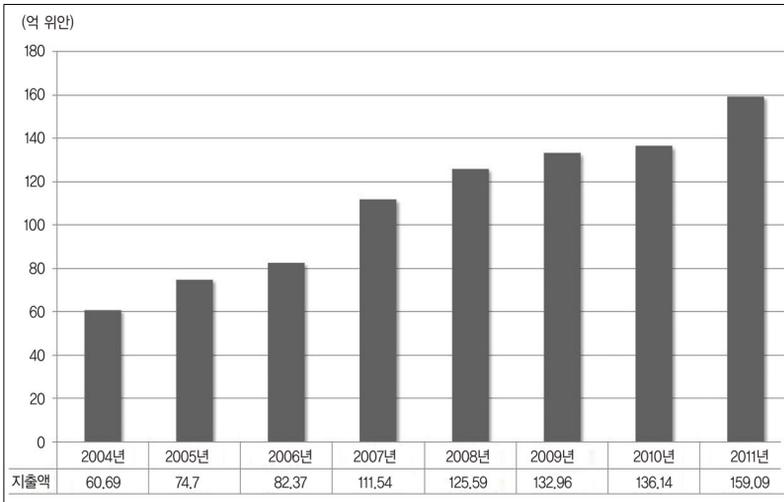
현재 연구 ‘모형 1’과 ‘모형 2’의 각 세부적 계수의 통계적 적실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나, 두 모형 모두 중국의 국력 성장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중심으로 추후 데이터를 추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중국의 국력 성장과 현상변경 시도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3. 대외원조의 증대

TGT 이론의 주요 측정 변수 중 다른 하나는 대외원조이다. 강대국일수록 대외원조를 현상변경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탈냉전 이후 경제와 종합국력이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 강화 차원에서 대외원조를 확대해 왔다. 특히,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종합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고 평화발전, 공동번영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대외원조 지출은 약 61억 위안을, 2011년에는 약 98억 위안 증가한 159억 위안 가량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약 14억 위안, 8억 위안, 29억 위안, 14억 위안, 7억 위안, 3억 위안, 23억 위안씩 증가한 걸로 나타난다.

●그림 Ⅲ-6 2004~2011년 중국의 대외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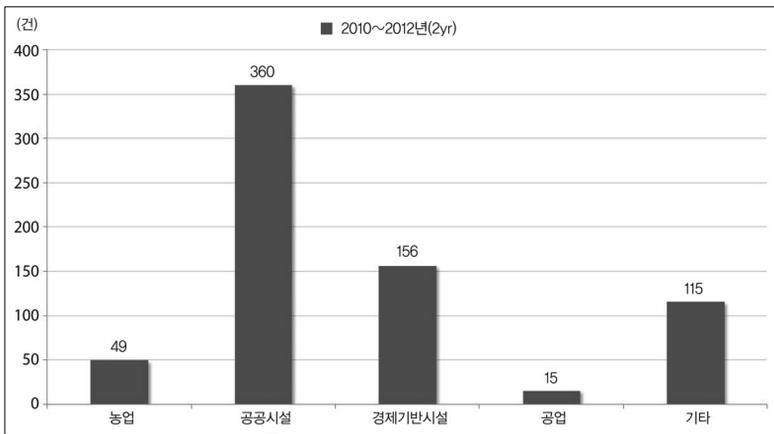
출처: 中國國家統計局, 『統計年鑒』 참조 편집, <<http://www.stats.gov.cn/tjsj/ndsj/>> (검색일: 2014.10.10).

또 다른 통계가 있다. 중국 국무원이 발간하는 『대외원조 백서(China's Foreign Aid White Paper)』이다.²⁶ 2014년 7월에 발간된 최근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원조는 크게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우대 차관의 3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0~2012년간 총 893억 위안(약 154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무상원조(323억 위안), 무이자 차관(73억 위안), 우대 차관(498억 위안) 형태로 제공했다. 우대 차관이 약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무상원조(약 36%), 무이자 차관(약 8%) 순이었다.

²⁶ 중국대외원조백서는 중국 대외원조 정책 및 담당기관, 자금공여 유형 및 형태, 지원 방식, 지역별·부문별 분포 등을 설명하고 있다.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白皮書(2011)』, <<http://www.scio.gov.cn/zfbps/wjbps/2011/document/896986/896986.htm>> (검색일: 2014.9.29).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방식은 플랜트 사업, 일반 물자 원조,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개발, 의료단 파견, 긴급인도 원조, 봉사단 파견, 부채 탕감 등이 있으며, 플랜트 사업이 주된 지원 방식으로 활용된다. 2010~2012년 중국은 총 80개 국가에 580개 항목의 플랜트 사업을 지원했고, 그중 공공시설이나 경제기반시설 등 인프라 건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²⁷

●그림 III-7 중국 대외원조의 2010~2012년 주요 플랜트 사업 분야



출처: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白皮書(2014)』, <<http://www.scio.gov.cn>>; 『新華網』 참조 편집,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14.10.10).

중국은 동 기간 총 121개 국가에 대외원조를 제공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국가가 51개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²⁷- 2011년에 발표된 중국 대외원조 백서에서는 1954년 북한과 베트남에 철도, 도로, 항구 등 인프라 시설 복구를 지원한 것을 시초로 2009년까지 건설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어 대외원조 지출의 약 40%가 이에 해당하며, 부문별로는 공공시설과 공업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白皮書(2011)』; 박민숙·박수경, “중국 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5, No.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참조.

아시아, 중남미, 카리브 연안, 유럽, 대양주 순이었다. 전체 원조의 80% 이상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다.²⁸ 중국의 최대 대외원조 대상 지역이 아프리카인 이유는 중국이 대아프리카 원조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흥시장 개척 등 경제적 이익과 정경분리,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원칙에 기반 제3세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III-4 중국 대외원조(2010~2012년)의 지역별 분포 현황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카리브 연안	대양주	기타	합계
51.8%	30.5%	1.7%	8.4%	4.2%	3.4%	100.0%

출처: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白皮書(2014)』, <<http://www.scio.gov.cn>>; 新華網 참조 편집,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14.10.10).

중국의 대외원조 업무는 주로 중국 상무부가 담당하지만, 원조 실행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외 원조를 투자 또는 수출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때로 원조와 투자 및 수출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중국 관방의 공개된 자료와 중국 대내외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서 부분적으로 발표하거나 추산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위의 통계자료만으로 추정해보아도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²⁸-2011년에 발표된 중국 대외원조 백서에서는 중국이 1950~2009년의 기간동안 총 161개 국가에 대외원조를 제공했고, 대상국은 주로 아프리카(45.7%), 아시아(32.8%), 유럽(0.3%), 중남미, 카리브 연안(12.7%), 대양주(4.0%), 기타(4.5%)였다. 國務院新聞辦公室, 위의 글 참조; 박민숙·박수경, 위의 글 참조.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외원조 증대와 함께 주목할 것은 중국의 대외원조 형태가 서구 강대국들의 식민주의적 대외원조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대외원조가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 획득을 위한 ‘신식민주의’ 또는 ‘신중상주의’로써 국제 원조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대규모 차관 제공으로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²⁹ 특히, 수단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까지 중국이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원조를 제공하자 이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개혁과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깨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초기 개발 원조를 통해 자국의 이해를 반영시켜온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대외원조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현상변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주변국과의 연대

중국이 국력증대에 따라 현상변경을 추구한다는 또 다른 측정변수는 중국이 역내 약소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건과 팔머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자국의 국력 성장에 따라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약소국들과 비대칭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탈냉전 이후 최

²⁹ 김동환·오병석, “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경제정책 변화: 냉전과 탈냉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4권 2호 (국제지역학회, 2010), p. 309.

강대국인 미국이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지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근거이다. 원래 소련의 확장정책에 대한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던 NATO는 소련의 몰락과 함께 해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국가들에게 정치적 사안을 설득시키는 틀/framework 중 하나였던 NATO를 해체시키지 않고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에게까지 확대시키며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³⁰ 미국의 사례처럼 중국도 강대국이 되면서 이러한 패권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비동맹(不結盟)을 자국의 공식 외교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동맹은 제3의 적대적 행위자를 상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인데, 냉전시기 강대국에게 동맹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면 약소국은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강대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며 외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았다. 이처럼 동맹은 일정수준의 공약(commitment)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이 공약에 대한 동맹구성국 간 상호 기대감의 편차에 따라 동맹관계는 협력과 갈등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수반한다.³¹

중국은 건국 이후 1970년대 말까지 동맹으로 인한 협력과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82년 비동맹정책을 표방하며 패권국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패권 행태를 반대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북한과 맺은 상호원조조약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³⁰-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sights from the 'Two-Good' Theory," pp. 51~52; 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Power Transition, The Two-Good Theory, and Neorealism: A Comparison with Comments on Recent U.S. Foreign Policy," pp. 341~342.

³¹-최명해, 『중국과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 363.

동맹조약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정책에 대해서도 냉전적 사고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난한다. 1982년 이후 중국의 정책은 동맹대상국을 확대하기 보다는 동반자관계 수립, 역내 다자레짐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약소국들과 연대하여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동맹정책을 선언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기존 선언과는 다른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실시한 ‘협력-2012’, ‘해상연합-2013’, ‘평화사명-2013’, ‘해상연합-2014’와 같은 연합군사훈련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 실시한 해상 연합군사훈련이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실시되었던 점을 살펴보면,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분쟁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니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중리 양국이 발 빠르게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행태를 본다면, 최근 양국의 협력 행보는 제한적 동맹 혹은 유사(quasi) 동맹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비록 중국의 비동맹 정책은 지속되고 있지만, 1980년대 중국이 표방한 비동맹정책이 2010년대와 그 이후에도 지속될 지의 여부는 보다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약소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며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력이 명시적으로 증강하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은 17개의 주변국가와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거나 심화시켰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 베트남과 전면적협력관계, 2002년 키르기스스탄과 선린우호협력관계, 2004년 시리아와 우호협력관계, 2005년 인도네시아와 전략적동반자관계, 2008

I

II

III

IV

V

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과 전략적우호관계, 2010년 캄보디아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터키와 전략적동반자관계, 방글라데시와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2012년 아프가니스탄과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동반자관계, 2013년 미얀마와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 파키스탄과 전면적전략협력관계, 아제르바이젠과 우호협력관계, 카자흐스탄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투르크메니스탄과 전략적동반자관계, 한국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협의하고,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의 주변지역인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권력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개의 주변국가와 동반자관계 구축 및 심화를 약속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자적 차원에서도 중국은 주변지역의 약소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먼저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세계적 강대국의 지위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중국처럼 직간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변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한다면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각종 다자간 협정과 조직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1994년 중국은 상하이 파이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켰다. 이는 중국이 원래 가졌던 다자레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때와는 매우 상반된 변화였다. 상하이 파이브는 상하이협력기구로 발전하였는데, 마틴 자크(Martin Jacques)는 그 미래를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한 블록을 형성하여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²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력 강화 역시 동아시아 지역 권력 구도의 재편을 기쁘하게 해준다. 2001년 중국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한 사항을 비롯하여, ‘2002년 남중국해당사자행동선언(DOC) 체결’, ‘2003년 아세안 국가들과 우호협력조약 조인’, ‘아세안+3’ 등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다자협력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례들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지만, 중국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이후에는 중국이 서틀외교를 진행하면서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주도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그 협력이 안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진단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중국은 이미 첫 단추를 끼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5월 21일 상하이 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CICA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안보관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안전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며 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안보대화화 협력의 무대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역설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³³

비록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동맹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국력이 증

³² 마틴 자크, 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울: 부키, 2010), p. 363.

³³ “시진핑, 아시아안보협력기구 창설 제안…미국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경고,” 『경향신문』, 2014년 5월 21일.

대하면서 주변국과의 연대 강화 추세는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미 일부 중국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서 중국이 비동맹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동맹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³⁴ 미국이 세계 각지의 42개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단 하나의 동맹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이 향후 동맹정책을 채택할지는 미지수이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주변외교 강화를 통해 자신의 친구이자 우군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TGT 이론의 주요 변수인 약소국과의 동맹 확대도 일정정도 중국에게 적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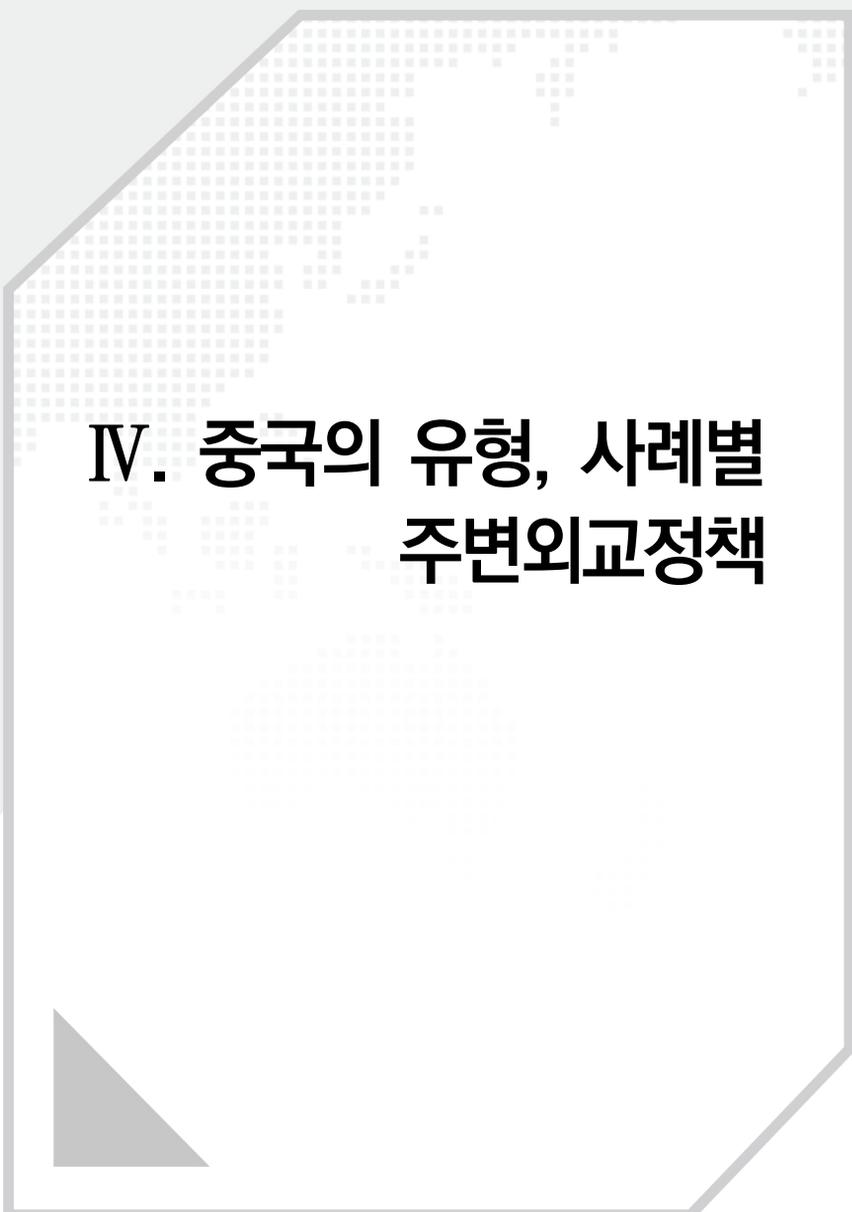
5.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일국의 외교정책 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현상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양성 뒤에는 그보다 더 복잡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외교정책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모형이 필요하다. 물론 모형이 그 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은 매우 모호하고 입체적인 현상들에서 일정의 패턴을 도출하고 반복되는 현상들을 단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외교정책 현상을 규명하는 것 역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모형의 적실성을 입증하고 이론화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³⁴- 엔쉐통,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서울: 글항아리, 2014), pp. 276~278.

중국학자들은 특히 중국의 외교정책 현상을 단순화시키는 이론적 작업에 많은 비판을 제기해왔다. “중국은 특별하다, 혹은 다르다”라는 중국 예외주의의 반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고 하더라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는 서방 강대국이 추구해온 질서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레토릭만을 남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다를 수 있다. 현재의 작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형과 이론은 비슷한 조건을 역사적 경험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만일 역사적 경험에서 증명된 모형과 이론이 중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중국의 미래 역시 그 역사적 진리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다.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TGT 이론은 중국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연구대상의 변수가 많고, 정확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를 가늠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은 국력 성장에 따라 자국의 선호를 주변 환경에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무력분쟁, 대외원조, 동맹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국의 주변외교 강화 현상 역시 자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시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V. 중국의 유형, 사례별 주변외교정책

이 장은 본 연구의 ‘가설 2’에 해당하는 “미국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이익 갈등 관련 변수가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이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주변국가별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3장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국력증대에 따라 국제질서, 특히 주변지역 질서의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현상변경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변수 역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주변국가들의 미국과의 관계 정도, 중국과 이익갈등 정도를 설정하였다. 다만, 특정 주변국가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상황이나 이슈에 대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국가든지 그 외교정책은 국가이익과 연동되며, 그 외교적 수단(방법)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국력이 증대하고 있는 중국이 주변지역 질서에 대해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3장의 연구결과를 전제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주변국가들의 이익갈등 정도 및 미국과의 관계라는 변수에 따라 중국의 현상변경을 위한 외교정책이 강압적 또는 포섭적일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 일본, 필리핀

미국과 동맹, 친미국가이면서 중국과 핵심이익 충돌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중국은 강압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일본과 필리핀이다.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협력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해양영토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고, 이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며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양보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고,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협의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부상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지역 질서의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 필리핀과 같이 중국과 핵심이익을 두고 충돌하고, 미국을 끌어들이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핵심이익 충돌에서도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은 물리력을 과시하거나 경제제재를 통해 자국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에 속하는 일본,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본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협력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聯美制中)”하려고 하는 가장 친미적인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해양영토 주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을 추구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였을 때 가장 협력적인 동맹국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질서에서 경쟁관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국력변화로 아시아 지역질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중국의 국력은 훨씬 빠르게 상승된 반면, 일본의 경제는 예상보다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다. 2010년 GDP 기준

으로 중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학자 왕지스(王輯思) 역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수치로 나타낼만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영향력 부분에서도 중국이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전반적인 전략적 고려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일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³⁵ 결국 일본은 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미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 해양영토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은 중국이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핵심이익이다. 해양영토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과 관련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분쟁보류’와 ‘공동개발’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센카쿠 열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은 크고 작은 논쟁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양국의 경제협력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센카쿠 영유권 갈등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왔다. 이와 같이 중일 간 해양영토문제와 관련된 핵심이익 갈등은 잠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말기인 2010년부터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일 간 갈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0년 9월 일본의 해상보안

³⁵ 葉琳·韓鐵英, “東亞新格局與中日美關係: 國際研討會發言摘要,” 『日本學刊』, 2011년 6期, p. 22.

청 순시선이 중국어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본이 중국어선의 선장을 구속시키면서 중일 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었다. 일본이 중국 선장을 구속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한 이유는 일본의 국내경제가 오랜 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지역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일본 국내정치의 우경화 추세가 대외정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국력이 증대되고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상승하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장관급 교류 중단, 항공편 증편 논의 중단, 석탄분야 협력 회동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³⁶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중국 대륙과 홍콩, 해외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어선 선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였고,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해양영토문제와 관련한 핵심이익 갈등에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93%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99%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 외에도 정치·외교적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이 제의한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였고, 1,000명의 일본 학생들을 상하이 엑스포에 초청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였으며, 허베이(河北)성에서 군사지역을 불법적으로 들어가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본인 4명을 구속시켰다. 이외에도 중국의 건강용품 제조업체인 바오젠(寶健)

³⁶ “中, 다오위다오 ‘보복’ 어디까지 갈까,” 『연합뉴스』, 2010년 9월 24일.

사는 직원 1만 명의 일본관광 계획을 취소하였고, 베이징(北京)시 관광당국은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본 여행객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전례없이 강압적인 정책을 취했다.³⁷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조치에 선장을 전격 석방하였다.

이후에도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상황은 지속되었지만, 일본은 오히려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대응에 더욱 공세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 하였고, 중국은 즉시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불법이기에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즉시 해양 감시선을 파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센카쿠 열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해기준선으로 선포하였다.³⁸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10년 9월 중국어선의 선장체포 사태 당시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정부차원의 공세적 대응은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중국 민영 항공국장은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의 지사와 예정되어 있던 회담을 예정 시각 직전에 취소하였고, 일본기업의 협찬으로 당해 12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하이 국제마라톤 설명 기자회견도 시작 5분 만에 중지하였다. 또한 중국국가해양국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한 당일부터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

³⁷ “中-日 충돌, 중국이 첫판 승,” 『조선일보』, 2010년 9월 24일; “일본, 중국 압력에 ‘센카쿠 갈등’ 백기,” 『연합뉴스』, 2010년 9월 24일; “중, 회토티 일 수출 중단, 자원부 기화 분쟁국 압박?,” 『머니투데이』, 2010년 9월 23일.

³⁸ “中國宣布釣魚島及附島領海基線,” 『新華網』, 2012年 9月 11日, <http://news.xinhuanet.com/photo/2012-09/11/c_123697742.htm> (검색일: 2012.9.12); “중 다오 위다오 영해기선 선포 의미는,” 『연합뉴스』, 2012년 9월 11일.



에 대한 기상예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³⁹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문가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⁴⁰

중국의 대응은 한층 더 나아가 2013년 11월에 동해에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고, 이 구역을 지나가는 타국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센카쿠 열도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중국해 상공의 대부분이 포함되었고, 일본이 1969년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상당부분 중첩되었다.⁴¹ 이는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과 핵심이익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정찰활동을 견제하고 공역(空域)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정치·외교적 대립을 가급적이면 경제와 민간분야로 확대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데 중국은 이전의 원칙을 깨는 강압적 조치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 행보에는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역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간주하는 영토문제에서 일본이

39-“일 ‘센카쿠 국유화’에 중 ‘영해기선 선포, 감시선 급파’ 맞불,” 『한겨레』, 2012년 9월 12일.

40-“專家: 日若更強硬, 中方或採取極端手段回應,” 『環球網』, 2012년 9월 10일,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2-09/3108060.html>> (검색일: 2012.12.7).

41-中國國防部, “國防部新聞發言人答記者問: 防空識別區並未擴大領空, 但可更有效保衛領空,” 2013년 11월 28일, <http://www.mod.gov.cn/video/2013-11/28/content_4476930.htm> (검색일: 2014.8.27);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동북아 긴장수위 또 ‘출렁,’” 『연합뉴스』, 2013년 11월 24일.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고, 그 행태의 배후에는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영유권 보류를 주장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1972년과는 다르게 센카쿠 열도 분쟁이 오늘날 쟁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 일본 학자인 아마코 사토시(天兒慧)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센카쿠 열도 해역의 풍부한 해저자원의 확보 △중국의 대국화에 따른 민족주의 고조 △아시아-태평양의 세력권 확대를 둘러싼 군사전략적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⁴² 이렇듯 중국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지역 질서 구축을 의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상당한 수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현상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강압적 관여정책은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일본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베 수상의 기고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대중정책을 살펴보면, ‘아시아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Asia Democratic Security Diamond)’을 통해 중국 포위망외교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포위망외교는 미국과 인도, 호주 등과 연합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 대해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⁴³ 이렇게 일본이 대중 견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그에 따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반영되었겠지만, 미국이 아시

42. 아마코 사토시, 이용빈 옮김, 『중국과 일본의 대립』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4), p. 142.

43. 윤석상, “중국의 대일본 정책,” 『중국 주변외교 전략의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확대자문회의, 2014.7.29) 발제문 참조; ‘Asia Democratic Security Diamond’ 구상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27일 국제 NPO단체인 Project Syndicate 웹사이트에 게재된 아베수상의 기고문 참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 (검색일: 2014.9.4).

아지역 질서 구축 과정에서 일본과 공동 전선을 취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언론은 “센카쿠 열도는 1972년 오키나와(沖繩)와 함께 일본에 반환된 뒤 일본 정부의 행정적 통제 아래 있었던 만큼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미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 측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⁴

영토분쟁에 있어서 제3자의 조정이나 관여 및 간섭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사국 간 해결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고유의 영토를 미일 양국이 서로 몰래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며,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로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⁵

이처럼 핵심이익 갈등이 부각되면서 부상하는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지연시키고자 하는 일본에 대해서 중국은 강압적 관여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천명하며 미국의 국력쇠퇴로 초래된 장악력(hegemony)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여기는 미국은 상당 정도 동맹국과의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

44- “영토분쟁에…노골적으로 일본 거드는 미국, ‘센카쿠는 안보조약 범위’ 美, 日 거들며 공동 전선, 중국은 강력 반발,” 『한국일보』, 2012년 7월 11일.

45- 中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劉爲民舉行例行記者會,” 2012年 7月 10日,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949624.shtml> (검색일: 2012.7.30).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⁴⁶ 따라서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적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수록 중국은 더욱 강압적 관여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이 핵심이익 문제인 영토주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일본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관여정책은 포섭적 관여정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주변지역 질서가 중국의 부상에 유리하게 조성되기를 바라며 중국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지만 상대국의 조치에 따라 그 수단을 달리 사용할 개연성이 크다. 즉, 물리력과 경제력을 사용하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자제하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구축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도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 이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협력하며 해양영토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핵심이익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필리핀에 대해서도 핵심이익에 대한 양보불가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등 강압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2014년 4월 말 필리핀은 미국과 방위협력증진협정(EDCA)을 체결하여,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했

⁴⁶ “日本外交舊瓶裝舊酒 強調拉美國給中國施壓,” 『人民日報』, 2012년 12월 30일, <<http://www.chinanews.com/gj/2012/12-30/4448410.shtml>> (검색일: 2014.10.10).

던 미군의 재주둔을 허용하였다. 이어 5월 초 중국과 분쟁중인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인근 팔라완(Palawan)섬에서 상륙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⁴⁷ 필리핀과 미국의 이러한 관계 강화는 필리핀이 중국과 겪고 있는 해양영토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 스카보러섬(黃巖島, 중국명: 황옌다오)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영토분쟁이 부각된 것은 2012년 4월 필리핀 군함이 중국어선이 스카보러섬 근처에서 불법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의 선원들을 체포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초계정 2척이 접근하여 양국의 군함이 한 달 넘게 대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필리핀이 한 달 넘게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필리핀의 동맹국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필리핀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맞섰기 때문이다. 2010년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동남아시아 순방 시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언급하였고, 2011년 아세안 외무장관 확대회의에 참여하여 중국과 아세안의 가이드라인 합의에 대해 여전히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첫걸음일 뿐, 미국은 계속 중국과 아세안이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⁴⁸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관여와 간섭에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2010년 3월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Braidy Steinberg) 미국 국무부차관과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 백악관 국가안

47- “미-필리핀, 남중국해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조선일보』, 2014년 5월 7일.

48- 김애경, “남중국해와 미-중간 이익의 충돌?,” 『중국전문가포럼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7.27), <<http://csf.kiep.go.kr/www/user/search>> (검색일: 2014.10.1); “對<宣言>實施准則表示歡迎美國今天闡述在南中國海戰略利益,” 『聯合早報』, 2011年 7月 23日, <http://origin-www.zaobao.com/yx/yx110723_603_1.shtml> (검색일: 2011.7.24).

보회의(NCS)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에게 남중국해는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루 지역과 함께 영토보전(領土完整)과 관련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공식적으로 밝혔다.⁴⁹ 또한 필리핀이 일본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 중국은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설을 통해 이를 비판하였다. 사설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 지원 아래 중국과 세력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⁵⁰ 이렇듯 영토문제에 있어 제3국, 특히 미국의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⁵¹

중국은 필리핀에게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수단까지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갈등이 발생한 후 중국은 필리핀 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고, 중국 질량검사총국이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의 과일검역 및 잔류농약 검사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리핀 정부를 압박하였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 푸잉(傅瑩)은 싱가포르의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동아시아 협력안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대국과 소국은 상호존중해야 하며, 대국이 소국을 경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되지만 소국도 멋대로(肆意) 대국을 침범하거나 도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필리핀의 행태를 경고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사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태를 낙관할 수 없으며 중국도 필리핀의 사태확대에 대해 각종 준비

49. “中國首次向美明確表態：南海是中國核心利益,” 『環球時報』, 2010年 7月 4日, <<http://world.huanqiu.com/roll/2010-07/901628.html>> (검색일: 2014.10.10).

50. “中, 美 안보지원 받는 주변국들 경고,” 『연합뉴스』, 2011년 9월 29일.

51. “美國提議凍結南海行動, 東盟外長反應冷淡,” 『環球時報』, 2014年 8月 11日,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4-08/5101217.html>> (검색일: 2014.10.10).

를 마쳤음을 강조하였다. 인민일보 해외판에서도 중국은 무력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것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⁵²

이처럼 중국은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무력충돌 위협 등 전방위적이고 강압적인 관여정책을 취하였다. 중국은 필리핀이 핵심이익과 관련된 해양영토문제에 있어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동시에 미국과 협력하면 할수록 강압적 관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판단했을 때 필리핀이 영토분쟁에 있어 현상유지를 견지하며, 중국이 제시하는 분쟁 당사국 간 협상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영토분쟁에 있어 미국을 끌어들이어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강압적인 정책은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질서 변경에 필리핀도 동참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필리핀이 설령 해양영토주권에 대한 양보까지는 불가능할지라도,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 협력하지만 않는다면 현재의 강압적 외교정책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필리핀 중국대사관과 접촉을 재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카보리섬 사건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준다.⁵³

52. “外交部：菲方變本加厲不斷擴大事態，”『環球網』，2012年 5月 8日，〈<http://world.huanqiu.com/hot/2012-05/2698832.html>〉（검색일：2012.5.13）；“評黃岩島對峙：忍無可忍就無須再忍，”『人民日報海外版』，2012年 5月 8日，〈<http://news.qq.com/a/20120508/000149.htm>〉（검색일：2014.10.10）；“傳臺新加坡媒體撰文：小國不能肆意侵犯挑釁大國，”『東方網』，2012年 6月 3日，〈<http://news.eastday.com/c/20120603/u1a6597948.html>〉（검색일：2014.9.12）。

53. 中國外交部，“外交部發言人洪磊舉行例行記者會，”2012年 5月 9日，〈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930206.shtml〉（검색일：2014.10.1）；中國外交部，“外交部發言人洪磊舉行例行記者會，”2012年 5月 10日，〈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930206.shtml〉（검색일：2014.10.1）。

2.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 베트남, 인도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핵심이익 충돌을 겪고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 중국은 강압적 관여정책과 포섭적 관여정책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베트남과 인도가 있다. 베트남과 인도는 미국 오바마(Obama)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로서 미국은 이들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중국과 영토 분쟁 등 핵심이익 갈등이 존재하거나 혹은 잠재된 핵심이익 사안이 분출될 개연성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중국은 상대국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인(誘引)하기 위해 포섭적 관여를 시도할 동인이 크다. 그러나, 중국과의 핵심이익 충돌에 대해서는 협상과 양보보다는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력 등을 동원하여 강압적 관여를 시도함으로써 강압적 관여와 포섭적 관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⁵⁴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에 속하는 베트남, 인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d.china-embassy.org/chn/fyrth/t930597.htm <검색일: 2014.10.1>.

⁵⁴ 마이클 스웨인(Michael D. Swaine)은 최근 그의 정책 논문에서 중국이 주변외교에 있어서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지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보상(rewards)을, 반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처벌(punishment)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세적인(asssertive) 조치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외교정책상의 커다란 변화라고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스웨인은 중국의 관료들은 타국이 중국의 이익을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중국의 경제력, 정치력 심지어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공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44 (Summer 2014), p. 25, <<http://www.hoover.org/sites/default/files/research/docs/clm44ms.pdf>>.

가. 베트남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상의 해양 영토 및 권익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 왔다. 중국은 일찍이 1974년에 베트남령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양사군도)를 점령하면서 베트남과 무력충돌을 빚었고, 1988년에도 난사군도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무력충돌을 일으켰고, 1992년 8월에도 난사군도 2개의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였다.⁵⁵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외교적 협상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던 양국관계는 근래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⁵⁶ 2011년 5월 26일 중국 순시선이 베트남 석유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 베트남은 자국 연안 200해리 내에 위치한 관할수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비난하였다. 6월 1일에는 중국해군 및 어업감시선이 베트남 트롤어선에 경고 사격을 가한데 이어, 6월 9일 중국 어업감시선은 또 한번 베트남의 남중국해 탐사 작업을 방해하였다.⁵⁷ 이에 베트남은 6월 13일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6월 15일 전시 참전면제 대상자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전쟁준비를 방불케 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⁵⁸ 이후 베트남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빌어 중국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려는 정서가 확연히 증가하였고,⁵⁹ 베트남의

55- 유철중,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삼우사, 2006), pp. 373~374.

56- 이영하, “중국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와 원인: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1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pp. 45~78.

57- “Scrutinising China’s Regional Ambitions,” *The Strait Times*, June 13, 2011.

58- 劉琳, “越南: 加強軍力, 虎視南海,” 『世界知識』, 2011年 15期, pp. 40~41.

59- “無敵情緒爲何蔓延越南, 借大國關係爭強鬥勇,” 『環球時報』, 2011年 6月 14日, <<http://world.huanqiu.com/roll/2011-06/1757482.html>> (검색일: 2014.10.10); 문순보,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정세와 정책』, 통권 183호 (세종연구소, 2011), pp. 4~7.

군중 수백 명이 중국대사관을 에워싸고 중국이 베트남의 주권을 침범하였다는 항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⁰

또한 베트남은 대중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해·공군력 증강계획을 발표하고,⁶¹ 미국과 조지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를 동원한 미국과 베트남의 연합훈련 실시 및 미 해군 함정의 베트남 기항 허용 등 해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였다.⁶² 또한 응웬치빙(Nguyen Chi Vinh)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2011년 9월 로버트 쉬어(Robert Scheer) 미 국방부 부차관보와 양국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양국 국방부 간 정기적인 고위급 대화 기구 발족, 해양 안보, 탐색 및 구조 등 5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⁶³ 동시에, 베트남은 대인도 군사협력 및 남중국해 유전개발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이 남중국해를 마주보고 있는 동남부의 군항 나짱(Nha Trang)에 인도 해군 군함의 진주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인도가 적극 호응하고 있고, 인도는 베트남에 대해 군함, 미사일 수출 관련 군사기술을 지원 하는 등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⁶⁴ 또한 베트남은 인도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남중국해 난사군도 부근에서 유전 두 곳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⁶⁵

60- “南中國海爭端大事年表,” 『多維』, 2011年 6月 14日, <<http://www.dwnews.com/search>> (검색일: 2014.10.10).

61- 잠수함 여단 발족, 러시아 최신형 호위함 2척 및 러시아 최신에 수호이 전투기 12대 등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시 가열되는 중-베트남 갈등 주목,” 『연합뉴스』, 2011년 8월 10일.

62- “베트남, 미국과 밀월관계 구축 가속,” 『연합뉴스』, 2011년 9월 27일.

63- 위의 글.

64- “베트남·인도 힘 합쳐 중 항공모함 견제한다,” 『조선일보』, 2011년 8월 5일.

65- 이에 중국은 2011년 9월 17일 인도양 남서해역 심해저 탐사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중국-인도간 안보 갈등이 고조되었다. “남중국해 유전 공동개발 인도·베트남 추진에 중 발끈,” 『조선일보』, 2011년 9월 17일.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과 핵심이익 갈등 분쟁으로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협상을 시도하는 등 두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1년 10월 베트남 공산당 응웬푸쑹(Nguyen Phu Trong) 서기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여 양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양 경계와 공동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였다.⁶⁶ 중국 역시 2011년 12월에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베트남의 노력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⁶⁷ 이는 베트남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심이익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중국이 포섭적 관여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아시아 회귀 및 재균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기존의 동맹국 및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⁶⁸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과의 외교·군사·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및 필리핀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포위망에 참여하지 않도록 견인해야 할 유인을 갖

⁶⁶-Edward Wong, "Q&A: M. Taylor Fravel on China's Dispute with Vietnam," *The New York Times*, May 8, 2014.

⁶⁷-時殷弘, "中國周邊行爲中曾有的"勝利主義：能動和決策複雜性," 『現代國際關係』, 2013年 10期, p. 3.

⁶⁸-Hillary Rodham Clinton, "Inaugural Richard C. Holbrooke Lecture on a Board Vision of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Department of States*, January 14, 2011, <<http://www.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rm/2011/01/154653.htm>>.

고 있다.⁶⁹ 이처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미중 양국이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3년 6월 19일 쓰엉편상(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이행 등을 약속하고, 해상 분쟁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까지 상호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도 쓰엉편상 베트남 주석을 초청하여 7월 25일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⁷⁰ 그 이후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2013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태국에 이어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였다.⁷¹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가 개선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5월 2일, 중국은 시사군도 해역에 석유 시추 장비를 반입하여 공사를 강행하였고, 베트남은 해군과 연안경비대 소속 초계함을 동원하여 저지하면서 중국측과 충돌하였다. 이에 베트남 내 반중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백 명의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중국은 베트남 내 자국민 철수, 베트남 여행 잠정 중단, 계획된 양국 교류의 부분적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관계가 악화되었다.⁷² 그러나, 6월 18일 중국의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팜빙밍(Pham Binh Minh)

69-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p. 21.

70- “미국-중국, 베트남 놓고 ‘구애 경쟁,’” 『연합뉴스』, 2013년 7월 11일.

71- 그러나 중국 리커창 총리는 필리핀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므로써 남중국해 분쟁의 양 대상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2- 이영하,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 정책 변화와 함의,”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4.6.23), <<http://www.kida.re.kr/nasa/report>> (검색일: 2014.10.1).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서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고, 중국은 7월에 석유 시추 장비를 철수하였다.

미국의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합참의장은 2014년 8월 14일 베트남을 방문하여 해양 부문에서의 협력과 무기금수 해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합참의장이 1971년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진다.⁷³ 그러나, 베트남은 8월 27일 레홍아잉(Le Hong Anh) 공산당 정치국원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여 양국관계의 갈등 해소 방안과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레홍아잉 특사는 시진핑 주석을 예방한데 이어,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도 남중국해 영유권 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2011년 서명한 『해상 현안 해결의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남중국해의 공동탐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⁷⁴

이처럼 중국과 베트남 간 양국관계가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핵심이익 갈등이 지속되는 동시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 영토 분쟁과 같은 핵심이익 갈등은 어느 일방이나 쌍방에 의해 분쟁이 격화될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

73-“미, 베트남과 군사공조 가속…중 견제 포석,” 『연합뉴스』, 2014년 8월 17일.

74-“劉雲山與越共中央總書記特使舉行會談,” 『人民日報』, 2014년 8월 28일, <<http://politics.people.com.cn/BIG5/n/2014/0827/c70731-25552100.html>> (검색일: 2014. 10.10); “대국굴기서 화평굴기로 시진핑 외교방향 틀었다,” 『서울경제』, 2014년 8월 28일.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포섭적 관여를 추구할 동인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 강압적 관여정책과 포섭적 관여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핵심이익 갈등에 있어서 양보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기 보다는 중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포섭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분쟁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고 시도할 경우, 중국은 강압적 관여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나. 인도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 및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티베트 망명정부 문제 등 핵심이익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국경 분쟁의 경우에는 비록 근래에 들어와서 양국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 동남부 지역인 라다크(Ladakh) 주변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⁷⁵ 언제든지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 간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및 중국의 인도양 진출 노력에 대한 인도의 우려에 따른 조치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강압적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국이 인도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

⁷⁵ “중국, 인도와 국경 군사 대치 문제 해결,” 『연합뉴스』, 2014년 10월 1일.

되고 있는 상황에서,⁷⁶ 중국은 남아시아의 대국인 인도와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인도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협력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포섭적 관여를 취할 동인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인도에 대해서 강압적 관여정책과 포섭적 관여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군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였던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양국 간 소규모 군사적 충돌은 1962년 중국이 인도를 전격적으로 침공함에 따라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으며, 중국은 군사·외교적 승리를 쟁취한 후 일방적 휴전을 선포한 뒤 현재의 실질통제선(LAC)까지 철군하였다. 양국은 오늘날까지 이 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회담을 마무리하였으며, 인도와의 국경분쟁도 원만히 해결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공고히 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양국 지도부는 양자관계의 발전과 국경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2005년 4월에는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뉴델리(New Delhi)를 방문하여 ‘중국-인도 양국 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⁷⁷ 이처럼 중국과 인도

⁷⁶ 중국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학자이자 전략가인 주펑(朱鋒)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세력균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학적 전략태세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거나 심지어는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다수 중국의 전략가들은 이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다. 朱鋒, “中國周邊安全局勢: 問題與挑戰,” 『現代國際關係』, 2013년 10期, p. 5.

⁷⁷ 박병광, “중·인 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pp. 151~159.

양국의 노력을 통해 국경분쟁이 양국관계에서 갖는 핵심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하락해온 것이 사실이다.⁷⁸ 그렇지만,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수백 명이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하는 실질통제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진입하면서 양국 군대 1천여 명이 대치하였던 사건⁷⁹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분쟁은 언제든지 재발되어 심각한 위기 및 충돌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경 위기가 재발된다면 중국은 역시 이에 대해 강압적 관여정책을 보여줄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1959년 티베트 점령 중공군에 맞서 봉기하였으나 실패한 뒤 인도로 탈출하여 북서부 다람살라(Dharamsala)에 망명정부를 설립하였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임시정부 체제를 갖추고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도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도의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한 지원은 1962년 중인 국경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대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중국은 인도의 티베트 망명정부 지원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오랫동안 달라이 라마 문제가 양국관계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인도의 티베트 망명 정부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는 추세이다. 200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바즈파이(Vajpayee) 인도 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시킴(Sikkim)주가 인도 영토임을 인정받는 대신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티베트인들의 인도 내 반(反)중국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07년부터 티베트인들의 인도 유입을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중인관계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인도로서는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정부 문제를 다

78- 趙幹城, 『中印關係現狀·趨勢·應對』(北京: 時事出版社, 2013), pp. 2~3.

79- “중국, 인도와 국경 군사 대치 문제 해결,” 『연합뉴스』, 2014년 10월 1일.

루는 데 있어 중국의 입장이나 요구를 고려하는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⁸⁰

한편, 중국은 남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통해 인도양의 해상통로 및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이익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은 2014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남아시아의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를 순방하였다. 중국과 몰디브는 해양협력과 기초시설 건설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스리랑카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시작과 함께 항구도시 건설 공동 추진에 합의하였다.⁸¹ 이에 대해 인도는 자국의 전통적 세력범위인 인도양 및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는 등 역내 기존의 영향력 유지에 힘쓰는 동시에 중국의 남아시아 진출에 대한 대응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대해 개입을 시도하면서, 베트남과 방위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⁸²

그러나 중국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일본 및 동남아 국가와 해양 영토 및 권익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시아의 대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인도와 정상 간 교류 및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³ 2013년 리커창 총리가 방글라데시-중

⁸⁰ 박병광, 『중국현대국제관계』, pp. 151~159.

⁸¹ “시진핑 亞 4개국 순방, 실�크로드 구축-주변외교 ‘일석이조,’” 『이데일리』, 2014년 9월 21일.

⁸² 趙幹城, 『中印關係現狀·趨勢·應對』(北京: 時事出版社, 2013), p. 4; 박병광, 『중국현대국제관계』, p. 162.

국-인도-미얀마(BCIM) 경제회랑의 발전을 제안한 데 이어,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간 회담에서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동시에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의 건설, 산업 투자 등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⁸⁴ 또한, 시 주석은 몰디브와 스리랑카 방문에 이어,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갖고 BCIM 경제회랑을 함께 개발하기로 하는 등 포섭적 관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국경 분쟁이 재발하거나, 인도가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강압적 관여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3. 친미·갈등+협력 유형: 한국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핵심이익이 아닌 기타 이익에 대한 갈등과 협력상황에 있는 주변국에 대해 중국은 포섭적 관여정책과 강압적 관여정책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주변지역 국가 중 일본과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에 강압적 관여정책을 취한 반면, 현재 한국에 대해서는 강압적 관여 보다는 포섭적 관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도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

⁸³ 譚凱家·李大光, 『中國周邊安全形勢概覽』(四川: 人民出版社, 2013), p. 182.

⁸⁴ “習近平南亞之行闡明政策新思路,” 『新京報』, 2014年 9月 17日, <http://epaper.bjnews.com.cn/html/2014-09/17/content_536168.htm?div=-1&news> (검색일: 2014.10.10).

I
II
III
IV
V

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지 아닌지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일지라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는지 여부에 더욱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에 비해 강화된 박근혜정부의 중국 중시 정책은 노골적으로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일본의 정책과는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일본에 대한 정책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이익 갈등과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과 서해에서의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어도의 관할권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국 간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 점 또한 일본과는 다르다. 물론 이어도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도 향후 매우 폭발성이 강한 핵심이익 갈등의 형태로 부각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양국 정부는 심각한 분쟁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만, 북한문제 및 북핵문제와 같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갈등의 여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그 대응을 달리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동시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해왔고,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관리보다는 사태확산 방지 및 긴장국면 완화에 주력하여 한국과 갈등을 겪었다.

북한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국가임에 틀림없다. 최근 중국은 주변지역 질서의 현상변경

을 위해 한국에 매우 적극적인 포섭적 관여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 변화가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이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시기에 따라 매우 상이하였다. 한국 정부가 동맹국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도모하는지는 중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2010년과 2013년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대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매우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던 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미국에 경도되는 외교노선을 선택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계획에 한국이 항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명했던 점,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의 연계성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점,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했던 점 등은 이명박정부의 대중외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었다.⁸⁵ 이 시기 중국의 대한국 외교정책은 비록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사용하여 한국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와 주변지역 안정

⁸⁵ “韓召見中國大使施壓金正日訪華，專家批韓幹涉中朝關係,” 『環球網』, 2010年 5月 5日, <<http://world.huanqiu.com/roll/2010-05/804312.html>> (검색일: 2014.10.10); “中 ‘천안함 北배후설은 추측…김정일 방문은 내부 문제,’” 『프레시안』, 2010년 5월 6일; “한국 ‘김정일 방중’ 항의에 중국 ‘주권 문제’ 공개반박,” 『한겨레』, 2010년 5월 6일; 中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董瑜舉行例行記者會,” 2010年 5月 6日, <www.mfa.gov.cn/mfa_chn/fyrbt_602243/jzshl_602247/t690286.shtml> (검색일: 2014.10.11); “韓媒稱三大不同突顯金正日訪華此次最高調” 『環球網』, 2010年 5月 6日, <<http://world.huanqiu.com/roll/2010-05/805237.html>> (검색일: 2014.10.10); “中國방부장 ‘천안함 선입견갖고 결론내선 안돼,’” 『연합뉴스』, 2010년 5월 12일.

이라는 이익달성을 위해 한국의 외교적 지지나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군사훈련을 통해 자국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예컨대 천안함 사태이후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잠수함 작전을 포함한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계획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의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와 기타 중국 근해에서 자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언론들도 한미연합훈련이 중국 국가이익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매우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저장(浙江)성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2010년 6월 30일~7월 5일)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대응까지 시도하였다. 이후 근 한 달 동안 중국은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에 대응하여 동중국해에서 8차례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⁸⁶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 수단을 강압적으로 운용하였던 데에는 당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한층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과 워싱턴의 정책결정그룹에서는 한미동맹이 최근 들어 가장 좋은 단계가 되었다는 합의(consensus)가 있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Victor Cha)와 엘린 김(Ellen Kim)은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통해 당시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2+2 미팅을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미팅은 한미동맹이 냉전시기의 군사동맹

⁸⁶ “中國明確在黃海東海南海宣示國家利益紅線,” 『廣州日報』, 2010年 7月 5日, <http://military.china.com/zh_cn/top01/11053250/20100705/16010215.html> (검색일: 2014.10.10); “中, 한-미 서해군사훈련에 강력 경고,” 『국민일보』, 2010년 7월 6일; 中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2010年 7月 8日,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714888.shtml> (검색일: 2014.10.1); “中 ‘천안함 계기로 美서 안방 넘볼라’…南 대신 北 감싸기,” 『동아일보』, 2010년 8월 6일.

보다 포괄적인 동맹으로 향상(upgrade)되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⁷ 당시 한미 양국의 협력은 그만큼 매우 긴밀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동맹국과 연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지연시켜 미국의 역내 패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킬수록 한국의 의도를 의심한 것이다. 중국학자인 리시광(李希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오랫동안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C자형' 포위망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파키스탄, 네팔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해상에서부터 육지까지 중국의 거의 모든 주변지역을 포위하였고 그 포위망을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이 한반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동서 양면에서 전략적으로 협공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⁸⁸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비록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일지라도, 미국에 편향된 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당시 북한문제 및 북핵문제로 중국과 협력적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했을 때도 중국은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남북 양국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냈다.⁸⁹

⁸⁷- Victor Cha and Ellen Kim, "US-Korea Relations: Smooth Sailing in the Wake of Cheonan," *Comparative Connections*, Vol. 12, No. 3 (October 2010).

⁸⁸-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環球時報』, 2010年 11月 30日, <<http://opinion.huanqiu.com/1152/2010-11/1301638.html>> (검색일: 2014.10.10).

⁸⁹- "徐寶康: 緩和半島局勢需要克制," 『人民日報』, 2010年 12月 28日, <<http://theory>.

그해 11월 27일 다이빙궈(戴秉國) 당시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의 방한은 강대국으로서 공정하게 사태를 판단하기 보다는 한반도에서 갈등국면이 확산되거나 긴장국면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한국의 위상, 해양경제계획과 관련된 이익 갈등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와 관련된 협력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2010년과 상이하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이 한미동맹 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대한국 정책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왕이(王毅) 중국외교부장은 2014년 5월 한중 양국의 관계가 역대 이래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평가하였다.⁹⁰ 이는 실제로 양국이 가장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심정적 희망을 표명한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은 그만큼 한국에 대해 포섭적 관여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진행된 시진핑 주석의 2014년 한국 방문은 수교 이후 최초의 단독방문으로 북한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people.com.cn/BIG5/13595221.html> (검색일: 2014.10.10).

⁹⁰ “王毅：中韓關係處於歷史最好時期，”『新華網』，2014年 5月 27日，<http://news.xinhuanet.com/2014-05/27/c_1110881600.htm> (검색일: 2014.10.10).

시진핑 주석의 한국 단독 방문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전쟁 이래 계속되는 한중 관계의 지정학적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남북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존 방법에서 탈피해 정치경제 전략상 한국 쪽에 서는 결심을 하기를 희망하였다. 아마도 이번 시 주석의 한국방문은 한국 정부와 사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⁹¹라는 베이징대 주평(朱鋒) 교수의 평가처럼 장기적으로 중국의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정치·경제적 협력파트너이기를 희망하는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현 지도부는 증대된 경제력과 향상된 국제위상을 기반으로 주변지역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 께안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최대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봉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제안,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부여, 역사문제에 대한 한중공조 제안, 8·15 공동 기념식 요청 등은 한국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적극성은 2010년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대응과는 다른 방식이다. 주변지역 질서의 현상변경을 위해 최대한 한국 께안기를 시도하여,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협력을 끌어내려는 포섭적 관여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에 대해 겉은 뜨거웠지만 속은 차가운 ‘튀긴 아이스크림’ 같다는 평가도 있다.⁹² 양국의 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91- “남북한 균형정책 께 시진핑 주석,” 『동아일보』, 2014년 7월 19일.

92- “중국의 구애는 왜 이리 뜨겁나,” 『중앙일보』, 2014년 8월 20일.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만큼의 성과가 많지 않고,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점 때문이다. 물론, 일부 이슈에서 이견을 좁힐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세이고, 이는 한국이 중국의 지역질서 재편에 있어 더욱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을 몽골방문(2014년 8월)과 함께 점혈식(點穴式) 외교라고 논평하면서, 한국을 신체 내 기(氣)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혈자리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을 지역질서의 현상변경에 있어 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상국으로 여기고 있다.⁹³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포섭적 관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포섭적 관여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관련하여 중국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다. 2014년 5월 28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불리하다는 견해와 미국이 이 지역의 관련 국가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⁹⁴ 사드의 한국 배치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 봉쇄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완성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⁹³-“習近平點穴式外交獲贊，中蒙更上層樓，”『環球網』，2014年 8月 22日，<<http://oversea.huanqiu.com/article/2014-08/5114582.html>> (검색일: 2014.10.10); 서정경, “미국? 중국?...점점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 『프리미엄조선』, 2014년 9월 4일.

⁹⁴-中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秦剛主持例行記者會,” 2014年 5月 28日, <<http://www.embajadachina.org.pe/chn/fyrth/t1160383.htm>> (검색일: 2014.10.1).

만일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해 협조 혹은 호응을 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 역시 커질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대한 한국의 호응도는 중국의 대한국 정책이 포섭적 관여일지, 아니면 강압적 관여일지에 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질서의 현상변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는 세력을 최소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4. 중도·갈등+협력 유형: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주변국에 대해서 중국은 대체로 포섭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몽골 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국가들에 대해 협력적 이익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영토분쟁의 문제가 없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미국에 경도되지 않거나 미국의 패권에 대해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국가들에 대해 최대한 경제력을 이용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 행태에 대해서는 중국과 동일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핵심이익과 관련된 영토문제를 모두 해결한 상태이다. 다만,

I
II
III
IV
V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경쟁관계였고, 최근에도 중앙아시아, 몽골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두고 양국은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어 이익 갈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의 교류확대와 같은 협력적 이익이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최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중국은 주로 외교적 지지 획득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구소련 양국은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1969년)을 경험했지만, 러시아와 1991년, 1994년, 2004년과 2008년의 협상을 통해 국경문제를 이미 타결한 상태로 현재 핵심이익 갈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양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였고, 중국은 구소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반면,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가장 충실한 파트너가 되어 다극체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인구학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지만, “2013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은 중국 및 인도와의 우호관계 발전”이라고 대외정책의 개념을 명시할 만큼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⁹⁵

중국 역시 러시아와 부분적으로 경쟁관계일 수 있으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표명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에 대응할 필

⁹⁵ 제성훈, “중국의 대러시아 정책,” 『중국 주변외교 전략의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확대자문회의, 2014.7.29) 발제문 참조.

요성이 있었다. 중러 양국은 인권과 민주 등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에 대한 대응, 분리독립 세력 및 주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 국내경제발전 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둘째, 중국이 표명하는 주변외교의 목표가 ‘핵심이익 지키기’와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핵심이익과 관련한 갈등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영토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동쪽과 북서쪽 양면에서 갈등관계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전방위적 협력을 추구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하자마자 2013년 3월 첫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를 중시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두고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역사적 의의가 있는 방문”이라고 평가할 만큼,⁹⁶ 중국은 러시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협력을 약속하였다. 당시 방문을 통해 32건의 협력을 약속하였고, 양국의 교역확대에서부터 석탄, 천연가스, 석유, 전기 및 신생에너지 등의 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무역투자 및 신용대출에 있어 자국화폐 사용, 농업과 임업 분야 등의 매우 광범위한 협력이 약속되었다.⁹⁷

96- “習近平俄羅斯之行：一次具有歷史意義的訪問,” 『中國新聞網』, 2013年 3月 25日, <<http://www.chinanews.com/gn/2013/03-25/4671047.shtml>> (검색일: 2013.3.26).

97- “專家解讀習近平主席訪問俄羅斯成果,” 『新華網』, 2013年 4月 3日, <<http://news.>

보다 구체적으로는 송유관 지선 건설을 놓고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즉, 중국이 송유관 지선 건설 방향을 두고 러시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9년 2월, 중국이 러시아에게 차관을 제공하면서 중국 쪽으로 송유관 지선을 연결하도록 하는 결론을 유도하였다.⁹⁸ 이렇게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포섭적 관여정책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와 안보분야 협력도 강화시키고 있다. 이미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3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와 함께 매년 ‘평화사명(和平使命)’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중러 양국이 별도로 해상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양국의 해상연합훈련은 2012년에 서해에서, 2013년에 동해에서, 2014년에 동중국해에서 실시되었다. 이처럼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나. 중앙아시아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일부 국가들이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였지만, 현재는 모두 철수한 상황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국경문제를 이미 해결한 상태로 핵심이익 갈등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이 국

xinhuanet.com/world/2013-04/03/c_124537249_3.htm> (검색일: 2013.4.4).

⁹⁸ 마틴 자크, 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p. 444.

가들은 향후 이 지역 질서가 어느 한 강대국이 독점하는 상태를 우려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과 잠재적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 분리주의·테러리즘·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협력적 이익이 훨씬 크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 협력하지 않도록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협력이 슈에 대해 외교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포섭적 관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국가들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이다. 중국이 지역의 개념으로 외교를 전개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초인데,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를 출범시키며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제조직의 명칭에 중국의 지역명이 들어가 있듯이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중국의 자부심은 매우 높으며, 중국은 이 기구에 대해 리더십과 주도권을 발휘하고자 한다. 상하이협력기구 사무국이 2004년 베이징에 설치되었고, 초대 사무국장 역시 중국인(주러시아 대사 장더광(張德廣))이 임명되었다. 상하이협력기구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2004년 회원국들에 대해 총 9억 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했고, 2007년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Bishkek)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추가자금 제공을 약속하였다.⁹⁹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역주의 접근은 다른 지역과 상이하다.

⁹⁹ 가와시마 신·모리 가즈코, 이용빈 옮김, 『중국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2), p. 251.

우선 기본적으로 안보적 차원이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하였고, 중국은 분리주의와 테러리즘 및 종교를 바탕으로 한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유인에서 출발하여 중국과 국경을 맞댄 중앙아시아 4개국과 러시아와 상하이협력기구를 출범시킨 것이다. 초기의 목적은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강화였지만, 2005년 이후 실시된 회원국들의 합동군사훈련은 그 내용과 규모면에서 비전통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전통안보위협의 대응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한 학자는 지역주의를 ① 역사적, 문화적 귀속의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유형, ②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강대국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체성에 의해 발로된 형태, ③ 경제협력과 환경협력 등의 명확한 기능을 설정하고 있는 정체성에 기반을 두는 형태로 나누어 본다면,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접근은 ②의 유형에 속하고, 40여 년에 걸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아세안과는 다르게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조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화의 조류가 우선적으로 지역을 습격하게 된다는 점을 학습하게 된 중국이 세계와 국가 사이의 중간에 완충지대로서 ‘지역’을 설정하여 세계화의 막강하고 파괴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¹⁰⁰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적 관여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일정 정도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하였던 주변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¹⁰⁰ 위의 책, pp. 254~256.

수 있다. 중국학자 왕지스의 ‘서진(西進)’에 대한 관점은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왕지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에 중점을 두었던 주변 외교의 대상을 서쪽의 국가들에게 확대시킴으로써 중국이 외교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¹⁰¹

중국은 외교공간 확대를 위해 우선 경제영역에서 ‘신실크로드 경제지대(新絲綢之路經濟帶)’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여 신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지대 계획은 고대시기에 있었던 실크로드를 따라 경제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구상을 통해 중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및 산업부문과 금융 및 무역부문에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¹⁰² 그 중심에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구상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재균형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신실크로드(New Silk Road)’ 계획을 표명한 바 있는데, 힐러리 장관이 밝힌 미국의 ‘신실크로드’ 계획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앞두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運輸), 에너지 및 기초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영기업의 투자확대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¹⁰¹- 王輯思, “西進, 中國地緣戰略的再平衡,” 『國際戰略研究簡報』, 2012年 73期, pp. 1~11.

¹⁰²-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지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주장환,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서진(西進)전략의 배경, 내용, 전망,” pp. 58~61.

국가들은 현재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므로, 만일 이들 지역이 미국에 협조하여 중국견제 전략에 참여하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중국이 경제제재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다. 몽골

1960년대 중소 분쟁의 격화와 몽골의 소련 추종으로 악화되었던 중국과 몽골 간 관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중소관계 개선, 소련 해체 및 냉전의 종식에 따라 정상화되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대외전략의 선택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몽골은 개방, 비동맹, 다거점(多支點)의 대외정책을 채택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발전을 대외정책의 우선 임무로 상정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제3의 이웃'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인접한 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밸런싱을 강조하고 있다.¹⁰³

그러나, 최근에는 몽골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척 헤이글(Charles Timothy Hagel) 미국 국방장관은 2014년 4월 몽골에서 양국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비전을 체결하는 등 몽골을 중국 견제에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몽골 엘벡도르지(T.Elbegdorj)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2013년 3월과 2014년 7월에 각각 울란바토르(Ulan Bator)와 도쿄(東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⁰⁴ 중국은 몽골이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견제 포위망에 참

103. 馬立國, “從地緣政治角度看冷戰後中蒙關係,” 『學術探索』, 2013年 9月, pp. 34~38.

여하지 않도록 안보 및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포섭적 관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8월 21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다른 국가 방문과 연계하지 않고, 몽골만을 단독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서로에 대한 독립, 주권, 영토통합에 대한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상대국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어떤 동맹이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3국이 자국 영토를 이용해 상대국을 겨냥하는 주권 훼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¹⁰⁵ 여기에는 몽골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것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9월 11일 타지키스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및 몽골 엘벥도르지 대통령과 함께 최초로 중·러·몽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시 주석은 “중·러·몽 3국은 좋은 이웃이며 좋은 파트너로서, 현재의 복잡 다변한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3국 정상이 함께 모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⁰⁶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3국 정상회담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104. “중, 1000년 갈등 뒤로 하고 몽골과 전면적 동반자 관계…미·일 견제도,” 『이데일리』, 2014년 8월 24일.

105. 위의 글.

106. 中國外交部, “習近平出席中俄蒙三國元首會晤,” 2014年 9月 11日, <www.mfa.gov.cn/mfa_chn/zyxw_602251/t1190336.shtml> (검색일: 2014.10.1).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최근 제안한 아시아 신안보관 및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설명하면서 자국의 역내 안보 및 경제 질서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골과 중국 간에는 정치·외교, 무역·투자 및 사회·문화 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등 협력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갈등 요인 또한 존재한다. 첫째, 중국과 몽골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로 인해 몽골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 심리가 존재한다. 즉, 몽골은 더욱 강대해진 중국이 몽골에 대해 영토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병합하려 할 수도 있다는 위협 인식을 갖고 있다. 둘째, 몽골이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는 점이다. 몽골은 비록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대만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으면서 중국에 대한 협상카드로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셋째,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여러 차례 몽골을 방문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몽골은 전체 국민의 85% 이상이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에 대해 비교적 동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¹⁰⁷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 요인들은 몽골의 특수한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요인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서 몽골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거나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기 어렵고, 다만 중국과의 비대칭적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밸런싱 조치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몽골의 기본적 국가이익과 정책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요인들로 인해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협력적 이익을 희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몽골에 대해 적극적인 포섭적 관여를 추구

107- 馬立國, “從地緣政治角度看冷戰後中蒙關係,” pp. 34~38.

하고 있다. 2014년 8월 시진핑 주석의 몽골 방문 시에는 무역,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의 분야에서 26건의 협력에 합의하면서, 300억 달러 규모의 석탄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은 오는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00억 달러로 늘려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이 밖에 중국은 자국의 화동 및 동북 지역의 항구를 개방해서 내륙국가인 몽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몽골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AIB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¹⁰⁸ 또한 9월의 중·러·몽 3국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3국의 발전 전략이 고도로 합치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러시아의 유라시아 횡단 철도, 몽골의 초원의 길 구상과 연계하여 중·러·몽 경제회랑을 구축하고, 철도 및 도로 등의 상호 연계망 구축을 강화하는 등 3국 간 협력을 제안하였고, 이는 러시아와 몽골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⁹

5. 중도·협력 유형: 파키스탄, 미얀마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 중국은 포섭적 관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로서는 파키스탄과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상대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국과의 협력적 이익을 확대시키려하고 있다. 중도·협력이익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8. 『이데일리』, 2014년 8월 24일.

109. 中國外交部, “習近平出席中俄蒙三國元首會晤,” 2014年 9月 11日.

가. 파키스탄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전천후, 전방위(全天候, 全方位)’로 불린다. 중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전천후’라고 불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이 유일하다. 2006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은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전천후 우정과 전방위 협력이 중파관계의 특징”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2007년 파키스탄 총리의 방중 기간에 중국은 “파키스탄이 중국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좋은 형제(好隣居, 好朋友, 好夥伴, 好兄弟)”임을 강조하였고, 파키스탄 역시 “중국과의 우호관계는 파키스탄 외교정책의 기반”이라고 언급하였다.¹¹⁰

파키스탄은 냉전시기 서방의 일원이었지만, 사회주의 진영이었던 중국과 실질적인 전략적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1950년에 국교를 수립하였지만, 동서 진영 간 냉전 시기에 파키스탄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동남아조약기구(SEATO)’에 가입하고, 중국의 UN 내 지위 회복 및 대만, 티베트 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62년 중국과 인도의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중국을 포위할 목적으로 인도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시작함에 따라 파키스탄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 및 인도에 대항할 것을 결정하였다.¹¹¹

중국 역시 중인전쟁 발발 이후 인도의 적대국인 파키스탄과 정치관계를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도를 압박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뚫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1963년 3월 「중국 신장과 파키스탄이 실제 통제하고

110- 譚凱家·李大光, 『中國周邊安全形勢概覽』 p. 180.

111- 杜冰, “全天候友誼與中巴關係,” 『國際研究參考』, 2013年 9期, pp. 27~28.

있는 지역 간 국경에 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양국 간 국경분쟁의 씨앗을 제거하였다. 특히 1965년과 1971년에 발발한 제2차, 제3차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당시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지하였으며, 파키스탄과의 유대관계를 기초로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최대의 무기 공급 국가인 동시에, 1990년대 파키스탄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²

이처럼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 전략적 이익의 합치, 국경 협정을 통한 핵심이익 갈등 소지 해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력적 이익의 공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파키스탄의 안정은 중국의 서북 변경 지역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래 중국-파키스탄 정부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은신하고 있는 분리주의자들을 함께 소탕함으로써 각자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파키스탄은 중국이 중동 및 이슬람 국가와 교류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억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3대 이슬람 국가이며 핵 보유국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파키스탄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이슬람 국가들과 정치, 경제무역 방면 등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파키스탄은 또한 중국의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에너지 수송의 주요 통로인 말라카 해협은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파키스탄이 인도양 및 중동으로 향하는 중국의 중요한 통로로서 인식되었다.¹¹³ 중국은 2007년 파키스

112. 박병광, 『중국현대국제관계』, pp. 159~160.

113. 杜冰, “全天候友誼與中巴關係,” p. 32, 43.

탄 과다르(Gwadar)항 협력을 시작으로 2013년 2월 운영권을 인수하여 중국해외항구유한공사가 항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추가 개발권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2월에 개최된 중국-파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후세인(Hamnoon Hussain) 파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회랑’ 추진을 통해 중국 신장과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경제협력지구 건설의 가속화에 합의하였다.¹¹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포섭적 관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미얀마

미얀마는 아시아의 동남부,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쪽으로는 안다만(Andaman)해, 서남쪽으로는 벵골(Bengal)만과 접해 있고, 육지로는 중국 및 인도와 접경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을 남아시아와 연결하는 동시에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말라카(Malacca)해협을 지키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1988년 미얀마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고, 미얀마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¹¹⁵ 중국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준군사동맹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정치군사적 원조와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2011년에는 ‘포괄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등 미얀마는 중국의 우방국으로서 간주되어 왔다.

¹¹⁴ 이효진·김영선·이장규,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8, No.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8.

¹¹⁵ 田立加·王光厚, “中緬關係面臨的挑戰及中國的戰略選擇,” 『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4年 5月, pp. 20~21.

그러나 2011년 미얀마의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부 정권이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개혁과 대서방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미얀마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정치군사적 의존을 탈피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¹¹⁶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미얀마의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관계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중단되었으며, 테인 세인 대통령이 2012년 5월 미국을 방문한 후, 오바마 대통령도 2012년 11월 미얀마를 방문하였다.

미얀마와 미국 간의 관계 강화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발전인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빼아픈 전략적 후퇴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게 정치·외교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전략에도 타격이었다. 우선, 중국은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말라카 해협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해협을 우회하여 파키스탄, 미얀마에서 중국 서부 및 중남부까지 송유관과 가스관을 곧바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파키스탄과 미얀마의 항구는 중국이 해상 에너지 수송로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 기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강화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미얀마 간 에너지 협력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단된 프로젝트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손(Myitsone)댐 건설 중단이다. 중국은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주 이라와디(Irrawaddy)강에 약 36억 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착공식 이후 공사에 돌입한 이 프

¹¹⁶ 백우열,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 『중국 주변외교 전략의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확대자문회의, 2014.7.29) 발제문 참조.

로젝트는 2011년 9월 미얀마 정부가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돌연 중단되었다.¹¹⁷ 이러한 사건에 고무된 미얀마 국내외의 비정부기구들은 환경파괴, 부패, 중국의 침투 등을 이유로 미얀마 정부로 하여금 송유관 건설을 포함한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미얀마 정부가 공동 투자해서 건설한 레트파다웅(Letpadaung) 구리광산 프로젝트 역시 환경 문제로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2012년 11월 중단된 경험이 있다.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중국과 미국, 인도, 아세안 간 관계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원조를 얻거나 아니면 미국, 인도 및 아세안이 중국을 견제하도록 할 수 있는 카드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미얀마는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갖게 된 반면에¹¹⁸ 중국은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뚫고 미국 세력의 확장을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생존 공간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미얀마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송로의 다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포섭적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리커창 총리가 BCIM 경제회랑의 발전을 제안한데 이어 시진핑 주석 역시 2014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방문 계기에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갖고, BCIM 경제회랑을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¹¹⁷- 김한권·이재현, “중, 석유 공급망 미얀마서 새로 구축 말라가 봉쇄 걱정,” (아산정책연구원, 2014.7.9), <<http://asaninst.org/contents/category/past-events/>> (검색일: 2014.10.10).

¹¹⁸- 田立加·王光厚, “中緬關係面臨的挑戰及中國的戰略選擇,” p. 21.

6. 반미·협력 유형: 캄보디아

반미 성향이 강하며, 중국과 협력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협력적 이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포섭적 관여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캄보디아가 있다.

중국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캄보디아는 과거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반미성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투자와 원조 등 경제적 협력을 통해 포섭적 관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캄보디아의 신정부 성립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는 우호관계의 기초 위에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2006년 4월 원자바오 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양국관계를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고, 2010년 11월에는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관계를 ‘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다시 격상시켰다. 또한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여 전략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양국 간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¹¹⁹ 이처럼 중국과 캄보디아가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0년대 중소 분쟁 격화와 소련과 베트남의 관계 밀착 등을

¹¹⁹ 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國際論壇』, 2013年 11月, p. 17.

배경으로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1979년 베트남을 공격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3대 조건 중 하나로 소련이 베트남으로 하여금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하였고, 결국 1989년에 베트남은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하였다.¹²⁰

캄보디아는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인 신장, 티베트, 대만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친수이벤(陳水扁)의 독립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11월, 22명의 위구르족 분리주의자가 캄보디아로 망명 신청을 하였을 때 훈센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냈다.¹²¹

한편, 2012년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 및 권익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및 베트남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당시 아세안의 의장국으로서 필리핀 및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을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아세안의 문제로 지역화, 국제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2012년 4월, 남중국해 스카보러섬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7월에 개최되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의제화 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가 강력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의제화하지 못하였고, 역대 최초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채 폐막되었다.¹²²

120. 牛軍,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概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 pp. 273~274.

121. 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p. 18.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외교전에서 중국의 승리로 종결된 2012년 7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의 전후를 살펴보면 중국이 핵심이익 지역인 남중국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적극적으로 관여적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3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캄보디아 왕국 간 공동성명』을 체결하였다. 동 성명에서는 “캄보디아와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공통의 인식을 이루었으며,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준수해서 실현해야 하며 … 남중국해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평화의 바다, 우정의 바다, 협력의 바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²³ 즉, 조만간 개최될 일련의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중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²⁴

이는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근년에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원조를 확대해 왔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투자액이 약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2억 8천만 달러의 40여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원조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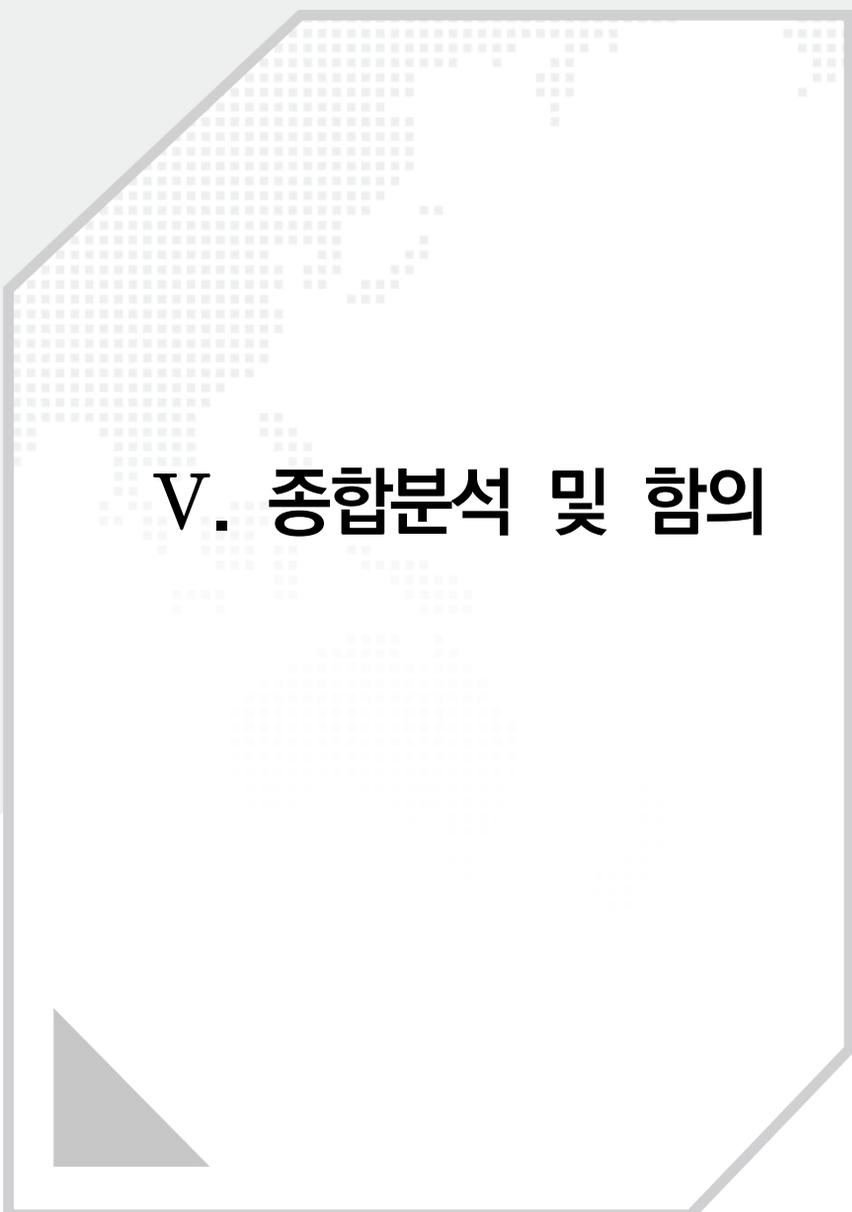
¹²² 이영학,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중국외교,” 인천발전연구원 역음,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경제-정책동향-한중교류-도시정보』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13), pp. 178~179.

¹²³ 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p. 17.

¹²⁴ 미국은 당시 이 상황을 경고하였다. 2012년 9월 조셉 윤(Joseph Yun)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프놈펜을 방문하여 캄보디아가 중국을 비호하고 있으며, 11월에 개최될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할 때에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방문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훈센 총리와 회담하였으나,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회담이었다. 李益波, “奧巴馬重返東南亞:擠占中國空間?,” 『世界知識』, 2012年 24期, pp. 24~26.

서 2012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에 최소 7천만 달러의 원조와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2012년 까지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우대 차관 총액은 이미 20억 달러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서거한 캄보디아의 전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를 향해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극진한 예를 갖추어 애도함으로써 중국이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²⁵

¹²⁵ 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p. 19.



V. 종합분석 및 합의

1. 종합분석

본 연구는 2개의 가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중국 주변외교 정책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이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확대하려는 현상 변경 시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즉, 중국이 국력증대에 따라 현상변경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모건과 팔머의 모형을 중심으로 국력과 현상변경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중국의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시도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무력분쟁, 하이테크 군비,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 행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의 검증을 통해 우리는 최근 중국 주변외교의 공세성 논란을 단순히 중국의 방어적 외교 행태 혹은 현상유지 선호가 아닌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현상변경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은 중국이 현상유지보다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시적 차원의 검증 다음 단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주변국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외교정책의 강도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현상변경 정책을 강압적 관여와 포섭적 관여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중국과의 이익갈등 정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별 사례 검증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국가별 외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으로,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이다.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과 동맹국가들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

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해양영토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물리력을 과시하거나 경제제재를 통해 자국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둘째,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으로, 베트남과 인도의 경우이다. 베트남과 인도는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핵심이익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베트남과 인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포섭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국가는 중국과 영토 분쟁 등 핵심이익 갈등이 존재하거나 혹은 잠재되어 있는 핵심이익 사안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은 이에 대한 강압적 관여정책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친미·갈등+협력’ 유형으로 한국의 경우이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핵심이익이 아닌 기타 이익에 대해 갈등과 협력 상황에 있는 한국에 대해 중국은 강압과 포섭적 관여정책을 동시에 시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일본, 필리핀과는 달리,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이익 갈등도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강압적 관여보다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넷째, ‘중도·갈등+협력’ 유형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의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핵심이익과 관련된 영토분쟁 문제가 없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미국에 경도되지 않거나 미국의 패권에 대해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국가들에 대해 최대한 경제력을 이용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중도·협력’ 유형으로 파키스탄과 미얀마의 경우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상대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또는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포섭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미·협력’ 유형으로 캄보디아의 경우이다. 반미성향이 강하고, 중국과 협력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투자와 원조 등 경제적 협력을 통해 포섭적 관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 V-1>과 같다.

● 표 V-1 변수별 중국의 주변외교정책

구분		미국과의 관계			
		친미(동맹)		중도	반미
		연미제중	연미화중		
중국과의 이익갈등 정도	핵심이익 충돌	강압 (일본, 필리핀)	-	강압+포섭 (베트남, 인도)	-
	갈등+협력	-	포섭>강압 (한국)	포섭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포섭 (북한)
	협력	-	-	포섭 (파키스탄, 미얀마)	포섭 (캄보디아)

I
II
III
IV
V

변수에 따른 중국 주변외교정책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중국과의 이익 갈등 정도의 변수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강압적 관여일지 아니면 포섭적 관여일지를 결정하였다. 즉, 중국은 핵심이익 갈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압적 관여를, 핵심이익 갈등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포섭적 관여를 선호하였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 변수 역시 중국의 외교정책이 강압적 관여일지 아니면 포섭적 관여일지에 영향을 주었다. 즉, 미국과 동맹국일수록 강압적 관여정책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맹국일지라도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는 강압보다는 포섭적 관여정책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양 대 변수는 복합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별 해석이 필요하였다.

-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는 미국과 관계가 가까우면서 미국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핵심이익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택은 강압적 관여로 나타났다.
- 한국의 경우는 핵심이익 갈등이 없지만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며, 미국과 동맹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중 봉쇄에 대한 참여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압보다는 포섭적 관여가 우세하다.
- 베트남, 인도의 경우는 핵심이익 갈등이 있지만,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핵심이익 갈등에 대해서는 강압적 관여를,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포섭적 관여를 동시에 추구한다.
- 핵심이익 갈등이 없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도 이하인 경우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포섭적 관여가 우세하다. 물론 각 조건에 따라 중국의 포섭적 관여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군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의 정도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했다. 대신 각 조건 군에 따라 중국의 외교정책이 포섭적 관여에서 강압적 관여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경우 현재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고 미국과의 관계 역시 중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정책이 주로 포섭적 관여로 나타나지만, 만일 중국과의 갈등 정도가 핵심이익 갈등으로 격상하거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도보다 더욱 친밀하게 변화될 경우에는 강압적 관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은 협력적 이익이 많고, 반미국가인 캄보디아 보다는 미국 요소가 작용하는 중앙아시아, 미얀마 등의 국가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2.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에 대한 과학적 분석 그리고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적극적으로 투사해 현상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각 주변국의 유형별로 현상변경을 위한 수단 즉 외교정책의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의 분석 방법은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가설 1’의 검증 결과에 따라, 중국은 국력 부상에 따라 주변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현상변경을 점차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북중관계는 한국전쟁의 경험, 사회주의 우방국, 북중우호조약 유지 등의 이유로 특

I
II
III
IV
V

수한 혈맹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왔다. 탈냉전기 북한은 개혁개방과 국제화의 길에서 동참하길 권유하던 중국과 관계 악화를 겪으면서도, 자주노선을 걸어왔고, 북핵 및 미사일 전략 등의 강화로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더구나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미국을 자극해 중국의 발전과 행동을 제약하였다. 특히, 1990년대 북핵 위기가 불거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상 북한 문제에 있어 방관자였다. 경제건설을 위한 도광양회 전략이 중국외교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도 실질적 역량도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래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지만, 6자회담의 주도국 역할을 수행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제재 참여, 석유 수출 일시 중단, 금융제재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친선 우호, 혈맹 등의 관계보다는 정상국가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¹²⁶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강화 차원에서 보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핵 정책과 북한정책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차원에서 대북 경제 원조와 유대 강화라는 수단을 더욱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대북 경제원조와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대

¹²⁶ “북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 ‘북중친선’ 생략,” 『연합뉴스』, 2014년 8월 20일.

북한 경제원조는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 중국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경제협력을 통한 영향력 확대 역시 지속·유지 혹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호 전략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외교 행보이다. 당시 중국은 2차 북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였지만, 북핵제재와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북한과의 경제 무역 거래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핵실험 이후 5개월 만에 북중관계를 정상화시켰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시켰다. TGT 이론에서 강대국 현상변경의 주요 변수가 대외원조와 동맹강화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있어 보상을 통한 포섭(유인)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2’의 검증 결과에 따른 중국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이다. 가설 2에 따르면 북한은 ‘반미·갈등+협력’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V-1> 참조). 북한은 전형적인 반미국가이다. 또한 중국과는 핵개발 문제 등으로 인한 마찰이 있지만, 전통적인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는 데 유용하고, 갈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이익까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국의 영향력과 질서를 투사할 대상이다. 다른 주변국가 유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과의 관계가 멀고, 핵심이익 충돌이 없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포섭적 관여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은 자국의 희망하는 주변질서로 유인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미국의 북핵 역제를 명분으로 대중 봉쇄가

강화되지 않기를, 그리고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핵개발 및 군사적 모험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동맹강화 전략이 강화되어 대중 봉쇄 혹은 견제가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부담론이 중국에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과거보다는 더욱 강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며, 북한의 핵과 군사도발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협상용 수단이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는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지만, 동시에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해온 것이다.

물론 중국이 국력이 증강될수록, 자국의 선호에 유리하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핵문제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는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맞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양국 간 협력 이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경제력 등을 동반한 강압적 관여를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중국은 자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규범(혹은 질서), 즉 비핵화, 남북관계 안정,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유인하는 포섭적 관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북핵 혹은 군사모험이 야기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등

이 중국의 핵심이익(영토, 주권안보)에 침해가 된다고 여기는 순간이 온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관여정책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다. 우선, 북한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혹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할 경우이다. 과거에도 중국은 북한이 자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관계강화 시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10·3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가 3자일 경우, 중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북한이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중국은 강한 반발을 하였다. 또한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이후, 비핵화 문제가 북미 양국 주도로 흘러간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와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였다. 표면적으로 북미 간 협상재개와 관계 회복을 환영하지만, 그 근저에는 북한이 자국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 북한의 중국 배제정책이 본격화되거나 그 결과로 중국의 주권안보에 직접적 견제가 확대될 경우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강압적 관여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핵보유 심지어 핵확산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즉,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동북지역의 핵안전(핵오염)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면, 또는 북한이 핵무기 등을 중국의 분리주의자나 테러리스트에게 전파할 경우 등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행위가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I
II
III
IV
V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중국의 주변외교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이해와 선호를 주변부로 투사하고 있으며, 이는 현상변경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²⁷ 최근 중국외교는 ‘신형대국관계’, ‘아시아 신안보관’, ‘일대일로 구상’, ‘AIIIB’ 등과 같은 아시아 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이러한 중국적 구상들은 분명 현상변경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변국들을 현존 질서에서 벗어나 자국이 주도하는 현상변경에 동참시키거나 혹은 유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중국이 설계하는 새로운 구상(질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에게 중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주변질서가 과연 유용할 것인가?”, “우리 외에 다른 중국의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중국적 질서를 적극 수용, 편승, 혹은 거부하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이다. 본 연구는 보다 큰 틀에서 중국의 주변외교 변화 과정 속에서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하였다. 물론,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양자관계의 특수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나무를 보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중국은 국력이 증대되면 필수룩 대북 관여 역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¹²⁷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공동연구자 외에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주재우(경희대), 이상숙(국립외교원) 등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즉, 북핵에 대한 관여의 강도가 세질 것이고, 동시에 경제적 영향력 제고 역시도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은 중국이 새롭게 설계하는 아시아의 구상(질서)에 어긋나고, 이 질서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처벌 혹은 압박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강대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대외원조)과 동맹강화 현상 역시도 확대될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 추세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강압적 관여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친미국가로 변화하거나, 당분간 중국과 핵심이익 갈등을 불사할 상황이 나타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우리의 시각 역시 어느 정도 명확해질 수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주변외교를 보다 적극화 혹은 구체화시킬 것이다. 북한 역시 중국의 주변국가이다. 양국관계의 특수성보다는 보다 큰 틀의 주변전략 차원의 대북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방향성은 이미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이 역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역내 구조적 환경 역시 쉽게 변화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 주변외교의 적극화 혹은 구체화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문제를 활용하였고, 등거리 외교를 통해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한중관계 발전과 북중관계를 연계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현상변경의 의도를 내포한 주변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새로운 주변질서 구축 작업에 주변국인 한국, 북한 모두 포섭의 대

상이 된다. 이 때문에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는 분리가 될 수 있다. 즉, 북한문제로 인해 한국 포섭(유인) 작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포섭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중국 주변외교의 강화는 중국적 질서(규범)를 주변국부터 투사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적 질서(규범)와 충돌 혹은 경쟁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역내 강대국들의 충돌 혹은 경쟁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역내 규범(질서) 충돌과정에서 강대국 간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는 포섭과 유인 전략이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양쪽 모두에게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역내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역량과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 발 스트레스와 부담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러브레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새로운 주변외교 전략에 그대로 유인 혹은 포섭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좀 더 까탈스러운 외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상품을 까다롭게 소비하는 구매자의 자세로, 더 나아가 소비에 있어 우리의 조건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조건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권안보 문제와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든 간섭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동시에 미중 양대 강국이 경쟁하는 규범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건을 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북한문제 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적인 관리와 자주적 방위를 위한 군사기술 강국화 시도 역시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참고문헌

1. 단행본

가와시마 신·모리 가즈코 이용빈 옮김. 『중국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2.

마틴 자크. 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울: 부키, 2010.

아마코 사토시. 이용빈 옮김. 『중국과 일본의 대립』.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4.

엔쉐퉁.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서울: 글항아리, 2014.

유철중.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삼우사, 2006.

이영학. 인천발전연구원 엮음.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경제-정책동향-한중교류·도시정보』.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13.

최명해. 『중국과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Elleman, Bruce A., Stephan Kotkin and Clive Schofield (eds). *Beijing Power and China's Borders*. Armonk, New York and London: M.E. Sharpe, 2013.

Palmer, Glenn and Clifton Morgan. *A Theory of Foreign Poli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World Steel Committee on Economic Studies. *Steel Statistical Yearbook 2013*. 2013.

牛軍.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

譚凱家·李大光. 『中國周邊安全形勢概覽』. 四川: 人民出版社, 2013.

張小明. 『中國周邊安全環境分析』.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3.

張蘊嶺. 『中國與周邊國家: 構建新型夥伴關係』.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趙幹城. 『中印關係現狀·趨勢·應對』. 北京: 時事出版社, 2013.

2. 논문

김동환·오병석. “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경제정책 변화: 냉전과 탈냉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4권 2호 (국제지역학회), 2010.

김현규. “다층적 세력전이이론으로 본 중·미 및 중·일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문순보.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정세와 정책』. 통권 183호 (세종연구소), 2011.

박민숙·박수경. “중국 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5, No.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KWP)』. 제22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이영하. “중국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와 원인: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1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이효진·김영선·이장규.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8, No.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이희옥. “중국의 주변지역전략과 대동남아 정책의 새로운 조정.” 『중소연구』. 제35권 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3권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주장환.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서진(西進)전략의 배경, 내용,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32권 (세종연구소), 2014.
- Cha, Victor and Ellen Kim. “US-Korea Relations: Smooth Sailing in the Wake of Cheonan.” *Comparative Connections*. Vol. 12, No. 3, October 2010.
- Jones, David M., Stuart A. Bremer and J. David Singer.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15, No. 2, 1996.
- Morgan, Clifton and Glenn Palmer.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sights from the ‘Two-Good’ Theory.” *Issues & Studies*. Vol. 35, No. 3, May/June 1999.
- _____. “Power Transition, The Two-Good Theory, and Neorealism: A Comparison with Comments on Recent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3, Issue. 3, 2007.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Publishing*. Vol. 2014, Issue. 1, 2014.
- Swaine, Michael D.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44, Summer 2014.
- Wang, Jisi. “Marching Westwards: The Rebalancing of China’s Geostrategy.”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Report*. Vol. 73, 2012.

- 翟崑. “新安全觀3.0版: 推進周邊命運共同體建設體建設.” 『世界知識』, 2013年 24期.
- 杜冰. “全天候友誼與中巴關係.” 『國際研究參考』, 2013年 9期.
- 劉琳. “越南: 加強軍力, 虎視南海.” 『世界知識』, 2011年 15期.
- 李益波. “奧巴馬重返東南亞: 擠占中國空間?.” 『世界知識』, 2012年 24期.
- 馬立國. “從地緣政治角度看冷戰後中蒙關係.” 『學術探索』, 2013年 9月.
- 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國際論壇』, 2013年 11月.
- 時殷弘. “中國周邊行爲中曾有的‘勝利主義’: 能動和決策複雜性.” 『現代國際關係』, 2013年 10期.
- 田立加·王光厚. “中緬關係面臨的挑戰及中國的戰略選擇.” 『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4年 5月.
- 王輯思. “西進, 中國地緣戰略的再平衡.” 『國際戰略研究簡報』, 2012年 73期.
- 吳琳. “冷戰後中國周邊政策的歷史演進.” 『國際論壇』, 2010年 3期.
- 閻學通. “中國外交全面改革的開始.” 『世界知識』, 2013年 24期.
- 葉琳·韓鐵英. “東亞新格局與中日美關係: 國際研討會發言摘要.” 『日本學刊』, 2011年 6期.
- 朱鋒. “中國周邊安全局勢: 問題與挑戰.” 『現代國際關係』, 2013年 10期.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머니투데이』.
- 『서울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프레스시안』.

『프리미엄조선』.

『한겨레』.

『한국일보』.

The New York Times.

The Straits Times.

『東方網』.

『多維』.

『廣州日報』.

『環球時報』.

『環球網』.

『經濟日報』.

『聯合早報』.

『人民日報』.

『人民日報海外版』.

『新華網』.

『新京報』.

『中國新聞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아산정책연구원. <<http://asaninst.org>>.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COW. <www.correlatesofwar.org>.

IISS. <<http://www.iiss.org/en>>.

OECD. <<http://stats.oecd.org>>.

SIPRI. <<http://www.sipri.org/research>>.

U.S. EIA. <<http://www.eia.gov/cfapps>>.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country>>.

國務院新聞辦公室. <<http://www.scio.gov.cn/zfbps>>.

中國國防部. <<http://www.mod.gov.cn/video>>.

中國國家統計局. <www.stats.gov.cn>.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mfa_chn>.

백우열.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 『중국 주변외교 전략의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확대자문회의, 2014.7.29.

윤석상. “중국의 대일본 정책.” 『중국 주변외교 전략의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확대자문회의, 2014.7.29.

제성훈. “중국의 대러시아 정책.” 『중국 주변외교 전략의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확대자문회의, 2014.7.29.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근,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웅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장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기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편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1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연례정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창호 외
2012-04(ㄷ)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2014년 대북정책 추진전략	최진욱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비매품

-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만, 김진하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9 788984 797901

93340

ISBN 978-89-8479-790-1